

# 국제질서 변동과 사회운동의 달라진 과제

: 한국 사회운동이 보지 못한 것, 보아야 할 것

2023. 11. 27 (월) 오후 7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다른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모임**

## 목차

### [발제]

**국제질서 변동과 사회운동의 공간**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_ 1p

**사회운동,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자**  
홍명교 (플랫폼c) \_ 17p

### [토론]

양동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_ 32p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_  
박석진 (중국 연구자) \_ p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 모임 안내** \_ 43p

## 국제질서의 변동과 사회운동의 공간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왜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사회운동은 국제질서의 변동을 예의주시해야 하는가? 세계를 돌아보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온갖 상품을 교역하고 금융시장은 분주하며 국민국가와 국제기구 시스템이 건재한 듯 보인다. 하지만 2023년 현재 국제질서는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쟁과 학살, 에너지·식량 위기, 바이러스의 창궐 등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국제질서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이 감각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다는 일종의 불안감일지도 모른다. 그런 막연함 속에서 우리 사회운동은 국제질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고, 주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1. 21세기 국제질서의 변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최근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우리 사회운동은 어떤 곤경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외교 노선을 따를 것인가 갈팡질팡하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회운동도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신장 위구르나 홍콩에 관해 애기하면서 중국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는 이들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를 재수립해야 한다고 보기도 하고, 미국의 달러 패권이나 군사 개입 등 각종 행태를 비판하는 이들은 중국을 필두로 하여 서구 선진국의 지배 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러시아나)는 두 선택지만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양자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일까? “누구의 편을 들래?”라는 물음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물어볼 수는 없을까? 중국에 대한 비판이 미국에 대한 옹호가 되고, 미국에 대한 비판이 중국에 대한 옹호가 되는 이 구도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국제질서의 변화를 평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기존의 담론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제질서를 국가 간 경쟁의 무대로 보고 국가를 최소 단위의 행위자로 본다는 점이다. 물론 일찍이 이러한 국가중심적 태도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요즘엔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 ISIS와 같은 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들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확대되는 국제질서의 변동에 관한 담론은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잃어버린 채 국가중심적 태도에 기초한 지정학적 틀에 갇혀 있다. 그로 인해 국제질서의 변동

과 관련해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국가뿐이라고 본다. 즉 행위주체성(agency)을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긴다. 이 때문에 국제질서의 변화가 펼쳐지는 공간,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행위들이 일어나는 공간은 국가 간 경쟁의 무대로 국한된다. 나머지 현실 속 공간들은 은폐되고,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담론에서 배제된다.

그러면서 사회운동의 주체들 또한 국제질서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별다른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여긴다. 국제질서에 관해 고민하는 건 너무 큰 얘기만을 반복할 뿐이기에 무용하고, 당면한 현실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런 건 외교의 영역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 연대하자는 움직임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때도 저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긴밀히 연관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감각하기란 쉽지 않다. 저들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도덕적 명제에 호소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국제질서의 변동은 단지 저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곳과 저곳을 가로지르며 작동하는 것이다. 이를 날카롭게 포착하여 저곳에서의 저항에 연대하고 이곳에서의 변화에 대응해나가는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의 변동 속 사회운동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사유하며 창출해나가야 한다.

현재 변동하고 있는 국제질서에 관한 담론은 국가중심적 관점과 지정학적 사고에 기초한다. 여기서 사회운동의 공간은 인식의 지평에서 사라진다. 분명 현실에서 존재하지만, 그 의미와 역할을 박탈당한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담론의 한계는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는 국제질서와 안보라는 두 가지 개념적 요인과 긴밀히 연관된다.

미국 엘리트가 주도하는 주류 국제정치학, 특히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는 국제질서를 무정부상태로 간주한다. 국가들 사이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 본다. 이렇게 국제질서를 무한경쟁 그 자체로 보는 태도는 다음 요인인 안보라는 독특한 국제정치학적 개념과 연결된다. 안보를 규정하는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전통적인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안보를 '국가'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로 규정한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무형의 위협, 언제 어디서 생겨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위협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 결과, 국제질서 변동이 제기하는 과제는 생존과 경쟁의 문제로 왜곡된다. 물론 안보 개념에 관한 비판적 연구들 덕분에, 최근 들어서는 안보를 국제적 차원에서 확대해서 국제질서의 안정을 회복하는 과제로 설정하기도 하고, 식량안보와 같이 기아나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다만, 그럴 때도 여전히 안보에 대응하는 주체는 국가이고, 안보 개념은 국가 내외부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위협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을 전제한다. 잠재적 위협을 가정하고 그것을 준-전시상황이나 전쟁과 같은 형태로 실현함으로써 국가가 통제하는 (이른바 베티 리어든(Betty A. Reardon)이 '전쟁 체제'라고 명명한)<sup>1)</sup> 경쟁적인 사회질서를 재생산한다.

그렇다면, 국제질서 변동 속 사회운동의 공간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식 지평에 나타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제질서와 안보를 기각해버리는 건 국가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안보를 여전히 국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에 불과하다. 대신 우리는 국제질서와 안보를 다르게 개념화해야 한다. 우리의 몫으로 그것들을 새롭게 전유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안보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샹탈 무페(Chantal Mouffe)는 안보를 엘리트나 우파의 전유물로 남겨두지 말고 좌파들만의 관점에서

1) 베티 리어든 지음. 황미요조 옮김. 2020.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 나무연필.

재전유할 것을 제안한다.<sup>2)</sup> 다양한 의제가 안보 이슈로 규정되는 경향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그러한 경향이 생겨나는 현재의 조건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걸까?

오늘날 안보라는 개념이 겨냥하는 문제들을 돌이켜보자. 그것들은 생명의 위협과 긴밀히 연관된다. 안보 개념은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가난과 빈곤 그리고 여러 경제적 불평등, 나아가 재난과 전염병, 심지어 기후위기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확장 경향은 생명의 위협이 국가의 생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함의한다. 예컨대, 기후정의에 대한 요구는 국경을 가로지른다. 전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는 인간공동체로서의 세계(World)와 환경적 조건으로서의 지구(Earth)라는 이분법을 넘어선, 이른바 행성적(Planetary) 차원<sup>3)</sup>에서 대응해야 하는 과제다. 나아가 전쟁과 재난, 전염병 등의 위협은 더 낮은 계층으로 더 쉽게 향한다. 그렇기에 국가 그 자체의 생존이 아니라 어떤 계층과 집단의 생명이 위협받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안보를 사회운동의 몫으로 전유하는 것은 두 가지 정치적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위협에 맞서자는 요구가 국가의 생명정치(Biopolitics)적 권력의 강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다. 국가는 특정 집단의 불공정한 삶의 조건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철폐해 위협에 처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는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력을 탄압 및 처벌하고, 특정 집단을 위협군으로 분류해 격리할 수도 있다. 현 체제를 신자유주의라 부르든 전쟁 체제라 부르든, 지금 이 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이미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존재들에게 취약성이 불평등하게 재분배하고 있다.<sup>4)</sup> 그것도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이를 내버려 둘 경우, 폭력과 재난의 폭증에 힘입어 국가폭력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차별과 죽음이 증식하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안보 이슈는 취약성의 불평등한 재분배라는 쟁점을 함축한다. 이러한 쟁점을 드러내고 그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조직해내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국가의 생명정치적 권력에 맞선 대항적 흐름을 구성할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배와 위협에 맞서 싸우도록 할 수 있다. 도덕적 명령이나 추상적 관념에 기대는 건 이론의 정교한 발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을 행동에 나서도록 하고 결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실천은 대중의 일상 경험과 구체적 열망을 토대로 공통의 감각을 형성하는 것에 출발하며 지속해서 그것을 자신의 기초로 삼는다. 따라서 우리 사회운동은 안보로 지칭되는 다양한 일상 속의 위협과 그로 인해 촉발되는 정념과 요구를 국가나 외교 및 행정 관료의 몫으로 남겨두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과제로 삼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위협이 특정 집단에 가중되거나 전가되는, 이른바 위협의 불평등에 맞설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선 변화하는 국제질서를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동안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개인주의가 상정하는 개인이 실재하는가를 되물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국가, 국경이라는 닫힌 테두리로 둘러싸인 어떤 몸을 지닌 실체로서의 국가라는 관념 또한 물음에 부칠 수 있다. 물질적 영토와 수적인 인구로 실체화된 국가들만이 국제질서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국제질서의 공간은 국가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기업과 재단, NGO나 사회운동단체, 여러 조직이나 집단, 개인과 심지어 비인간 행위자인 동물과 식물,

2) 상탈 무페 지음. 이승원 옮김. 2022. 『녹색 민주주의 혁명을 향하여』. 문학세계사.

3) 박명림·조소현. 2022. “안전하고 공정한 세계-지구시스템을 위한 행성성과 행성적 통로”. 『공간과 사회』 제32권 4호, p.173-210.

4) Dean Spade. 2011. Normal life : administrative violence, critical trans politics, and the limits of law. Duke University Press.

미생물과 바이러스 등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행위자(actor), 행위소(actant) 모두가 나름의 행위주체성을 띠고서 국가와 함께 국제질서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 사회운동의 공간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사회운동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 때론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유럽의 노동조합 운동이 제국주의적 수탈에 조력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방향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때론 냉전 이후 핵무기 위협과 냉전적 군사 대결 구도에 맞서 군축 및 평화 운동을 펼치거나 제3세계를 중심으로 식민지 해방 이후 정치적, 경제적 주권을 쟁취하는 데 힘을 보태는 사회운동이 존재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요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질서의 공간을 다양한 행위자, 행위소로 구성된 것으로 사유하는 것 외에 다른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국가를 의인화하되 국가가 행동할 때 준거하는 국제 윤리의 판단 기준과 행동 규범을 세우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즉 국제정치에서의 윤리(학)을 설정하는 시도<sup>5)</sup>라 할 수 있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국가들 사이에서 도덕이 존재할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세계시민사회 논의 또는 코스모폴리탄한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로 환원할 수 없는 국가 내외의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연대와 연합을 통한 윤리적 실천을 구상해보는 시도다. 전자는 주권이나 자유·평등, 평화와 같은 가치를 국제규범으로 삼으면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각 국가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들 사이의 민주주의를 고취하는 데 방점을 둔다. 그럼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진력해야 할 목표, 이를테면 기후정의나 경제적 평등 등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가장 이상적 버전이 세계정부에 대한 구상이다.<sup>6)</sup> 후자는 앞선 국가중심적 시각의 해체와 안보 이슈의 재전유와 직접 연관된다.

현존하는 사회운동의 공간은 국제질서의 변동을 논하는 담론의 장에서 끊임없이 지워지고 있다. 심지어 세계시민사회라 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걸로 무시되거나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이러한 두 공간 모두 국제 정세를 인식하는 지평에서 배제되고 은폐되고 있다. 대신 국가와 이념의 대결이라는 구도,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들의 다자주의적 협력 질서와 그것의 붕괴라는 틀이 전제하는 국가중심적 시각으로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들을 환원해버린다.

이에 맞서 사회운동의 공간을 중심에 둔 새로운 인식 지평을 어떻게 열어젖힐 것인가? 사회운동이 바라보는 국제질서의 변동에 관한 담론을 어떻게 재구성해낼 것인가? 이 물음은 인식의 문제를 넘어선다. 어떤 변화에 관한 담론은 추상적인 관념 속 얘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건 현실에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힘을 갖는다.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기반해 무엇을 요구할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수준에서든 구조적 수준에서든 어떠한 재편은 담론에 근거해서 행해진다. 요컨대, 현 상황을 어떠한 인식의 틀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물질적인 효과가 달라진다.

담론 구성에서부터 이미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주류 국제정치학, 지정

5) 이에 관한 논의는 구갑우의 『국제관계학 비판』(2008, 후마니타스)을 참고하길 바란다.

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하에서의 위협을 마주하면서 강대국 주도의 질서가 아닌 세계시민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950년대 이후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특히 예를 E. 헤리스는 『과멸의 목시록 - 과학적 패러다임과 일상의 사유양식』(이현휘 옮김, 2009, 산지니)에서 기계적 유물론과 원자론적 개인주의에 기반한 근대적 사유양식이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현대 문명의 회복을 위한 국제질서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학적 틀, 국가중심적 접근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현 정세가 규정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응하게 되는 경향을 충분히 견제할 수가 없다. 누구의 시선에서 현 정세를 규정할 것인가는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주된 과제다. 지구적, 행정적 변화가 제기하는 각종 안보 이슈를 행정 관료나 정치 엘리트들이 좌우하기 쉬운 정책적 차원의 문제로 남겨두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운동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우선은 국가중심적 시각을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해보자. 그래야 누구의 편에 서서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만의 물음과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 2. 전후 질서 붕괴론과 신냉전론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의 인식을 규정하는 기존 담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의 변동을 설명하는 논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7)</sup> 하나는 전후 질서 붕괴론이고, 다른 하나는 신냉전론이다. 각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들은 어디서 결을 달리하거나 같이 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현재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주류 담론은 국가중심적 시각을 공통된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현 담론 지형의 공통 기반이 어떤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기반을 흔들다면 무엇을 달리 얘기할 수 있을지 따져보려 한다.

### 1) 신냉전론 되짚기

먼저 신냉전론을 살펴보자. 신냉전론은 탈냉전 이후 다시금 냉전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가 수립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2010년대와 2020년대에는 국가들 사이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증대하거나 산업과 무역 경쟁이 격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다극 질서로 전환하고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미-중 경쟁 또는 미-러 경쟁이 강화되는 것에 주목한다.

흥미롭게도 신냉전론은 해당 논의가 전제하는 대결 구도의 양측 모두에서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부터 북한의 김정은 정권까지 현 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한다.<sup>8)</sup> 먼저 미국의 주류 외교·안보 엘리트들의 신냉전론을 보자. 여기엔 일말의 진실과 일말의 희책이 담겨있다. 그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면서도 해당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여긴다. 러시아가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주권이라는 규범을 위반했다고 규탄하고 잠재적으로 중국과 이란 등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탈할 가능

7) 신냉전론과 전후 질서 붕괴론을 구분하는 방식은 이해정(중앙대 정치국제학과)이 <동향과 전망> 116호에 발표한 2022년 논문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의 민주주의 기획, 그리고 새로운 국제 (무)질서”를 따랐다.

8) 2022년 12월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다”라는 세계정세 인식을 피력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진영 대결 논리를 토대로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한다. 상세한 분석은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2023년 2월에 연재한 [북한 신냉전 담론 시리즈]를 참고하길 바란다.

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그럼으로써 반(反)러시아 나아가 반중국을 내건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한다. 미국으로 표상되는 민주주의와 러시아와 중국으로 표상되는 권위주의의 대결 구도로 판을 짜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냉전 시절의 자유세계를 수호하자는 수사를 소환하여 나토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제압하려는 전략적 판단하에 이뤄지고 있다. 또한, 미국 주류 엘리트들은 신냉전이 도래했기에 앞으로 미-중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냉전에서처럼 자유주의 국가들의 동맹과 군사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상정하는 신냉전의 구도는 정말 현실에 부합하는 걸까? 과거 냉전과 오늘날에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이데올로기 대결의 유효성이 과거에 비해 약화했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유례없는 정도로 심화했다. 미국 주류 엘리트들의 신냉전 담론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나름의 논리를 펼친다. 그들에 따르면, 세계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었다. 아직까진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확고하므로 이를 활용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들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의 부흥을 다시 한번 꾀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건 ‘더 나은 재건’의 기치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미국 주류 엘리트들의 신냉전 담론은 일정 부분 현재 벌어진 사태에 발 딛고 있다.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 내 제조업이 쇠락하였고 중산층이 붕괴했으며,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림 1>과 같이 세계화 이후 선진국 내 불평등의 심화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그림 1. 1988~2008년 전 세계 소득 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의 상대적 증가율>9)



언뜻 보기엔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 명은 예측 불가능의 포퓰리스트고, 다른 한 명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춘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대하는 전략적 태도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물론 트럼프와 바이든의 외교 전략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건 미국이 국제질서의 조정자로서 나서야 한다는 기조가 다시금 전면

9)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국가 간 불평등, 국가 내 불평등의 변화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정희은 옮김, 2011. 파이가),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서정아 옮김, 2017. 21세기북스)를 참고하길 바란다.



장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미군의 해외기지를 축소하고자 했다. 현 미국 엘리트들이 보기에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는 1823년 먼로 독트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퇴행적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는 일은 곧 미국의 전 지구적 리더십을 복원하는 일이었다. 2008년은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하나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주도로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추진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 매파와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공화당에서 활동했던 네오콘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네트워크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sup>10)</sup>

정리하자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국제질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를 부흥시켜 미국 내 중산층을 안정시키려 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추진한 리쇼어링(reshoring)과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산업 재편과 자국 경제 활성화의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그러한 기조는 더욱 큰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이 국내적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리더십을 안정화할 수 있을까? 여기엔 의문이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과 산업 관련 규제 및 보조금 정책 등을 시행하는 등 인플레이션<sup>11)</sup>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와 FED 사이의 국채 사고팔기를 통해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고 있다. 통화량 팽창에 따른 여파를 조절하려고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테이퍼링(tapering)과 양적 긴축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부터 산업 유치까지 국고 보조금을 더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를 줄일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통화량 팽창으로 되려 심화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국내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쉽진 않다.

근본적으로도 유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통화 팽창에 따른 이득과 손실은 언제나 차등적이다. 자산과 소득에서 상위 계층일수록 통화량 증대에 따른 이득이 더 크며, 통화량 감소에 따른 손실은 더 적다. 이는 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신흥국의 소득 증가로 인한 선진국 중하층의 쇠퇴를 만회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경제를 재건하려는 기조를 놓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적자 재정과 양적 완화 등 각종 정책 수단으로 동원해 지속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타국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면서까지 중산층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오히려 금융 부문과 자산 소유 계급, 특정 대기업 집단의 배만 불리는 건 아닌지도 우려된다. 만약 미국 내의 경제적 안정을 높였다 하더라도, 국내외 여건상 이러한 방식이 지속가능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데 상당한 재정을 사용하고 있

10) 데보라 베네치알레, “미국을 전쟁으로 이끄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비자이 프리샤드 엮음. 심태은, 이재오, 황정은 옮김. 2022. 『신냉전에 반대한다』. 두번째판.

11)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관해선 논쟁이 진행 중이다. 주류 언론이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임금을 주로 꼽는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이나 현대화폐이론(MMT)를 따르는 학자들은 이에 반배하며, 임금이 아닌 기업의 이윤 추구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이사벨라 베버(Isabella M. Weber)는 탐욕인플레이션(Greedflation)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기업이 고물가 기조를 틈타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와 유사하게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자들의 시장 독점과 마크업(가격 설정) 행사에 주목하는 샌디 하거(Sandy Hager)나 요셉 베인스(Joseph Baines)의 연구도 있다. 본 글에서는 물가상승의 근인(近因)을 두고서 임금이나 기업 이윤이나를 다루는 논의는 잠시 미뤄두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통화 환경을 조성한 미 재무부와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의 통화 정책에 주목한다.

다. 그 규모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선 미국 내 불평등 완화에 필요한 자원 배분을 저해하거나 군수업체 등 미국 내 특정 집단의 이윤만 키워줄 뿐 정작 정부의 경제적 여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등이 충분히 달성된다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의 간접적, 직접적 개입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효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직접적인 방식의 군사적 개입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미국 정책 당국자들도 우크라이나에 2014년 유크라이나 혁명 이후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 고문단 파견 등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개입해왔고, 전쟁 발발 이후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SWIFT 제재, 해외 자산 동결 등 각종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걸로 전략을 바꿨다.<sup>12)</sup> 그럼에도 미국의 이러한 개입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확실히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은 자신의 군사동맹에 속한 서구의 유럽과 아시아 몇몇 국가들이다. 서구 유럽은 나토 가입국들이 주를 이루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호주, 한국이 해당한다.<sup>13)</sup> 그에 반해, 다른 수많은 국가가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 사이에서 양 진영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다. 결국, 광범위한 반러, 반중 전선 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뿔뿔 뭉친 연합이 결성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내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세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함의하는 건 아닐까?

\*\*\*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으로 표상되는 진영의 경계 사이에는 여러 국가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경제 불안정의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주류 엘리트들이 설정한 신냉전 담론에 맞서 또 다른 버전의 신냉전 담론을 제기한다. 이는 신냉전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을 반대하려는 움직임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의 사회운동들은 신냉전 하에서 심화할 군사주의를 견제하고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낮추며 국가 간 경쟁 속에서 기후·생태 위기에 맞선 지구적 연대가 무력해질 가능성을 피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신냉전 구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서, 신냉전을 막아설 과거 냉전 시절의 비동맹 운동과 같은 제3세계 운동을 새롭게 시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냉전 담론을 좌파 버전으로 전유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국주의만을 비판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을 금융자본주의에 맞서는 산업자본주의 국가로 설정해서 대안적 체제로 간주하고 중국 내의 경제불평등이나 구조적 위험을 무시하거나,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대항할 주요 거점이기에 이들과의 연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적이거나 반인권적 행태에 눈감아버릴 위험이 있다. 여전히 국제질서를 국가 대 국가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난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서구 국가들과 일부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기치를 내건 좌파들에서 제기하는 신냉전론(또는 신냉전 반대론)은 현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먼저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정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다. 과거 냉전

12) 2014년 유크라이나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관해서는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른다』(메데아 벤자민, 니컬러스 J. S. 데이비스 지음. 이준태 옮김. 2023. 오월의봄)을 참고하길 바란다.

13)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군사동맹에 속한 우방국들에 한해서 상시적 통화스와프 또는 비상시적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재무부나 FED가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동맹국들에게 미칠 경제적 여파를 상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하는 일종의 특혜이자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처럼 독재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식의 부정적 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재발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 자신조차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서구 국가들은 핵군축과 기후위기 대응, 주권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행정부의 행동에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또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다.

다음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이 증대한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경쟁이 격화되어서 에너지와 식량, 광물 등의 수출입 등에 제약이 생길 경우, 많은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반면, 미국은 FED의 단계적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2022년 3분기 3.2%로 회복한 데 이어 민간 소비, 재고 투자, 정부 지출 등에 힘입어 2023년 3분기에는 4.9%를 기록했다. 이를 가리켜 ‘나홀로 호황이냐’는 얘기도 있다. 지난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언제나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 먼저 영향을 미치고 주변부의 경제가 악화한 이후에야 비로소 선진국 경제에 다다르며 가장 마지막에 미국 경제에 타격이 가해지는 식이었다. 그 와중에 미국 사회 내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사회집단에서부터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sup>14)</sup> 덧붙여,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지켜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경제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도 높아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편하려는 신냉전 구도에 관해 서구 진영 내에서도 균열이 포착된다. 유럽 내부에서 현재 미국의 행태를 비난하며 반발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탈냉전 이후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경제 전략은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내 에너지 공급망과 생산-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던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복되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유로화는 기축 통화 또는 대안 통화로서의 전망과 역량을 잃어버렸다.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된 것이다. 한 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지정학적으로 재편되었다.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과 중국이 탈동조화(decoupling)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삼아 독일-러시아-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네트워크 구축을 견제하고자 했다. 돌아보면, 나토의 장기적 확대 경향은 유럽연합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옮기는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를 배제하고 독일을 통제하며 유럽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 위협이 실질화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군축이 아닌 군비증강 기조로 전환되었으며, 미국을 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분담하면서 자국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해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려는 기획은 무산되었다. 미국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나아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여러 경로로 이전에 비해 전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럽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나토에서의 군사적 역할 강화와 기존 정책 노선의 전환이 강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유럽에서 전쟁과 경제위기에

---

14) 2008년 이후 미국이 시행한 양적 완화와 최근 FED와 재무부 간 국제 사고팔기를 통해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은 김종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논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제국주의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정치사회학적 의미”(2022. 경제와사회), 발표문 “화폐팽창과 제국주의”(웹진 인-무브, <https://en-movement.net/412>)를 참고하길 바란다.

대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핵무기 레짐(비확산, 핵군축, 핵억지 등을 포함하는)에 대한 지지가 약화하는 등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한 여러 노력이 퇴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요컨대, 신냉전론은 일말의 진실과 일말의 획책을 담고 있다. 이를 면밀하게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정치 엘리트와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는 국제질서 재편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유럽과 비서구 국가들에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신냉전론은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

신냉전론의 여러 버전 중 이념 대결과 진영 대결에 초점을 두는 주장의 경우, 가치 외교나 이념 논쟁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가치 외교에 반대하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쪽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주장은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국익’이라는 말로 포장해버리기 일쑤다. 몇몇 비서구 국가나 일부 좌파들은 신냉전론이 제기하는 미국과 중국(또는 러시아)의 갈등이라는 구도를 수용하면서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주로 비판한다. 대신 미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과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비동맹 운동을 고민하는 측에서 종종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물론 무비판적 긍정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연대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러시아 푸틴 정권의 문제점을 은폐해버릴 수 있다.

무엇보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좌든 우든, 신냉전론은 편을 가르는 이분법적 틀에 갇혀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결 구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실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선, 신냉전론이 전제하는 각 진영의 대표 주자들은 국제질서에서 강대국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강대국들의 대결이 곧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에 처한 다른 국가들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 오히려 강대국들의 대결이 어떻게 다른 국가들을 향한 착취와 억압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념에 기초한 가치 외교나 실용주의적 태도로는 포착할 수 없는 쟁점이다. 비동맹 운동을 지향하는 목소리는 강대국들의 대결로 환원되지 않는 제3세계의 공간을 드러내 준다. 그러한 대항적 움직임이 어느 한 강대국의 편들기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강대국들의 무대 밖에 존재하는 다른 국가들에 주목하듯이 국가들로 환원되지 않는 국제질서 속 또 다른 공간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신냉전론 중 국가 외 다른 행위자들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 금융과 생산 부문 내 행위자들에 주목하는 홍호평(Hung Ho-fung)의 작업이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의 금융 기관, 투자자와 은행, 기업들은 국경을 가로지르며 이해관계를 공유했다. 그러나 ‘차이아메리카’라 불리던 이들의 공생 관계가 최근 들어 경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이를 가리켜, 신냉전으로 이행하는 것이라 평가하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디커플링(decoupling)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과거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만큼의 경제적 단절에 이르게 될까? 경제적으로만 봐도 에너지와 원료 공급 및 가치 사슬 내 분업, 금융상의 채권-채무 관계 등의 얽힘은 상당하다. 이를 고려할 때, 냉전 시기와 같은 정도로 둘 사이가 단절되리라 단언하긴 어렵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건 공생과 대결의 진자운동 속에서 부와 권력을 지속해서 독점하고 축적해나가는 상위 계층의 존재가 아닐까.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불평등한 체제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국가 간 불평등과 국가 내 불평등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문제를

15) 홍호평 지음. 하남석 옮김. 2022. 『제국의 충돌』. 글항아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맥락을 고려해야 체제 전환을 위한 비판적 정세 인식이 가능해질 것이다.

## 2) 전후 질서 붕괴론 되짚기

전후 질서 붕괴론은 신냉전론에 반론을 제기한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백승욱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한 국제질서와 그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욱은 현 국제 정세가 냉전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전후와 더 유사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교훈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성립되었다고 보며, 이 질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한다. 강대국들의 대립이 격화하여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는 시기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 팬데믹의 발생이다. 이러한 전염병의 대유행은 19세기 말에 진행된 세계화와 21세기 초에 진행된 세계화의 결과다. 둘째, 자유주의의 위기다. 19세기 말에 고전적 자유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국가 간 블록화가 심화하며 제국주의적 대결로 격화했다. 마찬가지로 21세기 초에는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는데, 조금 다른 점은 금융적 통합의 결과로 사회가 해체되고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셋째,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신화가 붕괴하고 자유주의 제도가 쇠락하며 파시즘이 부상한다는 점이다. 칼 폴라니식으로 말하면, 사회의 자기 보호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포퓰리즘이 창궐하고 극우 정당이 융성하며 권위주의 체제가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자본주의의 등장이다. 과거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의 길, 즉 뉴딜, 사회주의, 파시즘으로 분기했다. 백승욱은 중국을 대표적 예로 삼아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고 전시자본주의적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여기서 백승욱은 과거와 현재 가장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는 건 사회운동의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사회주의 운동이 고조되고 노동조합 기반 정당의 제도 진출이 확대하며 광범위한 반식민지 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미래지향적인 사회주의 운동이 부재하고 각종 극단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러한 정세 속에서 전후 전 지구적 뉴딜과 소련식 사회주의의 불충분한 역사적 타협이 이뤄진 데 반해, 오늘날에는 새로운 전망이 제시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을 던진다.

백승욱을 비롯한 전후 질서 붕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전제는 다음과 같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규범 혹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냉전과 탈냉전기를 관통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승욱은 자신의 저서에서 전 지구적 뉴딜과 소련식 사회주의의 역사적 타협을 설명하면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정세 인식과 미래 비전에 주목한다. 서문에서 사회운동의 동력을 언급하지만 정작 전후 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서구 또는 비서구의 사회운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들의 전망과 요구가 어떻게 실현되거나 좌절되었는지는 분석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의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상의 아쉬움을 차치하고서라도, 역사적 경험에 비취볼 때 전후 질서 붕괴론의 대전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주권 국가에 대한 존중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있는가? 그러한 규범이 존재했으나 실제로 그 규범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

기라고 요구한 이들은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이 아닌 과거 식민지를 경험했던 비서구 국가들이었지 않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전후 수립되었고 작동되었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냉전 이후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 미국의 패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던 시기를 냉전 시대에 투영한 ‘회고적 상상의 담론’<sup>16)</sup>은 아닐까?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질서에 대한 회의와 비판은 전후 합의가 이뤄진 직후인 195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1955년 반동회의를 계기로 추진되었던 비동맹 운동, GATT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며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질서를 만들자며 1964년 발족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유엔에서 제3세계주의가 강화되면서 197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선언」 등이 존재했다. 이러한 비동맹 운동을 이끌었던 제3세계 국가와 사회운동의 흐름은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시작되어 주변부를 휩쓴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으로 인해 좌초되었다.<sup>17)</sup> 오일쇼크 이후 스태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태환 정지 선언, 볼커가 주도한 기준 금리의 급격한 인상 등은 1980년대 일련의 외환위기를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IMF의 주도하에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따라 제3세계 경제가 재편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세계 곳곳에 개입하였다. 이에 맞서 그러한 미국의 행보가 군사적 일방주의이며, 오히려 해당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파괴자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반복해서 거론되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사회운동이 제기한 비판을 떠올려보라.

2008년 이후 월스트리트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시행한 양적 완화는 2010년과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의 식량 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중동의 재스민 혁명이 촉발되었다.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는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튀니지와 이집트 등에서 정권 교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사회적 혼란과 빈곤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ISIS와 같은 극단적 이슬람원리주의가 힘을 얻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을 활용해 식량 위기에 편승하여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월스트리트 투자자들만 이득을 챙겼을 뿐이다.

한 마디로 주권 규범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마찬가지 아니었나 하는 회의가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전후 국제질서가 과연 국제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었으며 질서정연하고 안정적이었는가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후 국제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는 평가는 러시아가 영토를 정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후 질서의 핵심인 주권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전제하는데, 그러한 전제가 그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했던 사례에는 눈감도록 해주는 것은 아닌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후 질서 붕괴론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 엘리트들이 설정하려는 신냉전 구도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수사에 부합하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어쩌면, 신냉전을 반박하는 것을 내세우지만 실은 신냉전론의 구도를 은연중에 (또는 의도적으로) 변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전후 질서 붕괴론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다. 그건 국제규범의 중요성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뤄진 몇 차례의 합의와 전후 수립 및 제정된 국제기구와

16) Poter, P. 2018. "A World Imagined : Nostalgia and Liberal Order." Policy Analysis, 843.

17) 덧붙여, 비동맹 운동 스스로도 내셔널리뷰에 입각한 근대 국가 건설에 자신들의 전망을 제한함으로써 제3세계에서의 연대를 침식하는 경향도 존재했다. 제3세계의 시각으로 냉전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보려면, 『갈색의 세계사』(비자이 프리샤드 지음. 박소현 옮김. 2015. 뿌리와이파리), 『비동맹 독본』(서동진·박소현 엮음. 2020. 현실문화)를 참고하길 바란다.

국제법은 지금도 중요한 참조점이다. 그것들을 통해 연성 수준에서 국제규범이 확립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물론 명문화된 조약이나 국제법부터 느슨한 수준의 국제규범까지 어떤 것도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된 적이 있냐고 물을 순 있다. 그렇게 완벽히 실현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국제규범의 존재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국가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마치 자유-평등 명제와 같다. 그것들 또한 완벽히 실현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자유-평등 명제는 항상 저항과 혁명의 준거점이었다. 자유-평등을 반복해서 불러냄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요구할 수 있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초국적 기업과 금융의 극단적 이윤 추구를 규탄하는 등 국제규범에 근거한 윤리적 행동에의 요구는 지금도 유효하고 정당하다.

따라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제규범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그에 근거해 현재 국제질서의 변동을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 3. 현 정세가 사회운동에 제기하는 과제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냉전과 전후 질서 붕괴론에는 공통 전제가 있다. 바로 국가중심적 시각이다. 이 때문에 신냉전과 전후 질서 붕괴론 모두 일정한 한계에 부딪힌다. 첫째, 안보에 관한 여러 쟁점을 국가의 생존이라는 하나의 쟁점으로 환원해버린다. 그러나 국경을 가로지르는 계급, 젠더와 퀴어, 장애, 생태 등의 수많은 갈래는 결코 국가의 안위나 이익으로 치환될 수 없다. 둘째, 국가 간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배제하고 강대국 간의 게임으로 바라본다. 물론 약소국들 사이의 연합을 통한 제3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생겨날 순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여전히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따지게 된다. 이는 앞선 첫 번째 한계와 연관되어 결국 국가 대 국가의 틀로 나머지 쟁점을 흐릿하게 해버린다. 강대국들의 경쟁과 공생의 모순적 구조를 타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조 속에서 재생산되는 불평등이 문제 또한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다르게 말해,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현재 담론 지형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질서의 변동이 단지 세계적 차원에만 논의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국제질서의 변동은 세계와 지역, 지역과 사회를 가로지르며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상호교차성을 형성하는 여러 항의 역임을 국내질서에서 파악하듯이, 국제질서의 변동에서도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국제질서가 신냉전론의 구도대로 변화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대국들의 군사적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이다. 그럴 때,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비어튼의 표현을 빌리면, 전쟁 체제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군사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이다. 다양한 수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그 자체로 막대한 에너지를 소진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정의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제적 연대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 와중에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내전, 각종 국지전과 테러는 사회를 붕괴시키고 자연을 황폐화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멸종을 거듭해온 온갖 생물종들은 군사적 갈등이라는 또 다른 방식을 통해 다시금 멸종으로 내몰린다. 세계와 지구 모두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극우화가 더욱 진전되고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된다.

증오에서는 아무것도 태어나지 못한다.<sup>18)</sup> 그러나 증오의 연쇄는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 현 체제가 어떻게 증오를 만들어내는지 묻지 않은 채, 증오를 불확실한 위협, 본질적 위협으로 둔갑시키며 대처와 경쟁 나아가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정당화하는 주장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중심적 시각과 강대국 결정론에서 벗어나서 국제질서의 경계에 서면, 국제규범을 온전히 실현하길 바라는 수많은 요구 - 이미 존재하는 요구들이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목소리를 더욱 더 드러내고 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국가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상호교차의 선들을 포착할 날카로운 관점과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연합의 기획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시진핑 체제의 신장 위구르와 홍콩에 대한 탄압, 바이든 행정부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방관, 유럽 각국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중동 이주민·난민 차별 등은 비단 다른 나라의 안타까운 일로 남겨질 수 없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불평등 심화, 다국적 기업과 국제은행 및 금융가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 감소, 미국 정부의 각종 제재 등이 시진핑 체제가 더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한다. 그러한 역사적 조건의 형성은 국제질서의 변동의 한 결과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대일로에 맞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을 엮어서 새로운 물류·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IMEC 기획,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의 핵 협상 무산 등은 중동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변화시켜 지금과 같은 팔레스타인 학살 사태로 이어졌다.

최근 국군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열식을 하는 장면은 뭘 보여주는 걸까? 핵무장론의 실현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각종 의제와 투쟁들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 국제질서는 곳곳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안정과 회복, 평화를 향한 동력은 단지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국가 전략과 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단순히 말한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아래로부터의 압력 없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방향으로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국내외 사회세력의 분출하는 정념과 요구, 변화하는 정세가 만들어내는 역사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변화의 동력을 구성하고 그 방향을 뒷받침한다. 우리 사회운동이 마주하는 한국 사회의 여러 투쟁 현장들을 어떻게 재구성해낼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다.

\*\*\*

그렇다면, 국제질서의 변동을 우리는 어떤 시야를 갖고서 마주해야 할까? 우리가 그리는 다른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주요 원리는 주권(sov<sup>er</sup>eignty)이다. 주권은 한 국가가 자신이 관할하는 국경으로 구획된 영토 안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최상위 권리를 가리킨다. 주권에 대한 존중과 실현은 전후 질서가 내세운 핵심 가치다. 그러나 과연 주권을 담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보편적이지 않다. 국가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국가들은 서로 불평등하다.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를 영토적으로든 비영토적으로든 예속시킬 수 있다. 국가 외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를 놓고 보면 또 어떠한가. 이주민과 난민들은 주권을 구성하는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

18) 우라사와 나오키의 그래픽노블 『플루토』에서 안드로이드 형사 게지히트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을 인용한 것이다.



적 대표성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권리는 이미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되는 존재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들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는 이들은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주권이 전제하는 권리 개념은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독자성에 근거한다. 그래서 주권을 위협하는 여러 안보 이슈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 규정된다.

주권의 보장과 실현이 증오를 끊어내고 폭력을 멈추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삶과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 사이에 격차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폭력이다.<sup>19)</sup> 희망은 잠재된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수많은 몸짓에 내재해 있다.<sup>20)</sup> 폭력은 희망을 억누르며, 희망은 폭력에 맞선다. 우리의 역량을 저해하며 우리의 역량이 실현되는 걸 가로막는 각종 기제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일상 속에 깊이 묻어 들어가 있다. 일상화된 구조적 폭력은 혐오, 차별, 죽음을 낳는다. 군사적 갈등과 전쟁과 같은 형태의 물리적이고 직접적이며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이 점증하고 있다. 이렇게 점증하는 폭력은 다시금 일상화된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한다.

이러한 악순환에 맞서 희망을 꿈꾸기 위해선 비폭력이라는 오랜 쟁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디스 버틀러는 비폭력에 관한 기존 담론을 무너뜨리고 비폭력에 근거한 새로운 윤리-정치를 발명하자고 제안한다.<sup>21)</sup> 그에 따르면, 비폭력은 단지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버틀러는 취약성을 존재의 상호의존성에 항상 내재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상대를 지탱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관계에 얽매어 있다. 서로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상대와 협력하기도 하고 상대를 해하기도 한다. 때로는 상대를 미워하고 그 상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생명은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상화된 구조적 폭력부터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물리적 폭력은 바로 이런 존재론적 의존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비폭력을 실천하는 일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게 된다. 돌봄은 무한히 아름답지만 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다. 돌봄은 취약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불평등의 정치, 상호의존성에 내재한 폭력적 가능성을 다른 식으로 전유하는 정치적 실천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법과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우리 삶의 필요와 기회를 이전과 다르게 분배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며 타인에 대한 자선과 국가들 사이의 연대를 촉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천은 분명 세계를 변혁하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법제를 개혁하고 도덕에 호소하는 것만을 사회운동의 유일한 목표로 삼을 순 없다. 이것들과 더불어, 사회운동에 제기되는 과제는 지금과는 다른 관계 양식을 재발명하는 것이다. 현 체제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며 전쟁 위기를 고취한다. 여기서 생명들은 끊임없이 썩어지면서 누군가는 배제되고 외면받는다. 버틀러는 취약한 생명들을 애도하면서, 그러한 생명들을 서로 보살피는 돌봄의 실천이야말로 비폭력적 저항의 한 면모라 주장한다. 돌봄의 실천은 단순히 서로 돕자는 자선과는 분명히 다르다.<sup>22)</sup> 자선에는 현재 불평등한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이 결여되기 쉽다. 우리의 필요를 평등하게 충족하고 각자의 역량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선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걸 돌봄 정치<sup>23)</sup>라고 불러야 할지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 Johan Galtung.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6(3), 167-191.

20)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인디고 연구소 기획. 2014. 『희망, 살아 있는 자의 의무 - 지그문트 바우만 인터뷰』. 궁리.

21) 주디스 버틀러 지음. 김정아 옮김. 2021.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22) 딘 스페이스 지음. 장석준 옮김. 2022. 『21세기 상호부조론』. 니케북스.

23) 돌봄 정치를 오늘날의 폭력적 지배 체제 극복의 길로 제안하는 연구로 김정희원의 "반폭력으로서 돌봄 정치"(2023. 황해문화 제120호, p.130-153)을 참고하길 바란다. 돌봄 이론으로 국제관계를 새롭게 사유하려는 시

이 시대를 안정되게 평화롭게 살아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은 모든 생명이 평등하게 자신의 역량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갖춰질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을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sup>24)</sup>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이 해방된 세계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세계다. 단순히 전쟁에 반대한다는 구호에 머물러선 안 된다. 현 체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현 체제가 발 딛고 서 있는 관념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사회운동의 과제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주권 국가는 성립할 수 없는 명제다. 거기엔 언제나 주권 국가의 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을 빌미로 치안 권력이 강화되는 식으로 국가폭력이 정당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담론은 오늘날 안보 이슈로 제기되는 당면 과제들을 특정 국가의 생존 여부로 치환한다. 그때 자기는 도대체 누구인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기라는 게 존재하는가? 이를 끊임없이 되물음으로써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윤리적-정치적 실천은 최대주의가 아니라 최소주의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부하고 이미 낡아버렸을지 모를 존재론적 규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인 존재론적 토대인 상호성을 다시금 불러내는 것 말이다. 돌봄은 갈등 없이 아름답기만한 그런 게 아니다. 서로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고 보살피는 일에는 항상 일정한 공격성, 이를테면 격분과 미움과 슬픔 등이 뒤섞여 있다.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죽여 없애거나 죽게 내버려두지 않도록, 서로의 삶을 엮어내고 돌보도록 하는 정치적 기획이 요구된다.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정의롭게 풀어가는 과정이다.”,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sup>25)</sup> 부단한 실천의 무수한 시도 속에서 점차 평화에 가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

---

도에 관해서는 『돌봄: 정의의 심장』(다니엘 잉스 지음. 김희강·나상원 옮김. 2017. 박영사)의 4장 “돌봄 이론과 국제관계”도 있다. 잉스는 돌봄을 세계시민주의 전통에 둔다. 이 때문에 올바름을 실현하자는 도덕적 주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며, 심지어 돌봄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어느 정도 돌봄을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버틀러는 취약성과 상호성의 존재론 토대를 재정초함으로써 돌봄을 답이 아닌 하나의 질문으로 정식화한다. 돌봄이라는 질문을 풀어내기 위한 수행적 실천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24)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의 소개문을 참고하였다.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보다는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25) 이용석. 2021. 『평화는 처음이라』. 빨간소금.

## 사회운동,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자

### 한반도 군비 축소와 평화를 위한 체제전환 운동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

홍명교 (플랫폼c)

#### 군비 경쟁 심화와 전쟁 위기

동아시아 전역의 핵무기 개발과 군비 증강 움직임이 고삐 풀린 말처럼 번지고 있다. 일련의 군비 증강 흐름은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고, 각국 내부에서는 반대파의 비판이 미미하다. 가령 한국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 사이에 노골적이리만치 유사한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군비 증강’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군비 증강에 적극적이었다. 2017년 40조3천억 원이었던 군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2년 54조6천억 원에 달했다(5년 사이 35.5퍼센트 상승). 이에 더해 2022년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폴란드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 규모로만 최소 10조 원이고, 향후 중장비 군수지원 물량까지 포함하면 한국산 무기 수출계약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의 결과, 글로벌 파워이어파워(Global Firepower)의 군사력 지수(GFP index)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197개국 중 6위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도 10위에서 네 계단 상승한 것이었다. 한데 한국의 이와 같은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에 대해 보수 양당의 논자들은 환호일색이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며 한참 군불을 때기도 했다. 물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리는 없겠지만, 대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남한 정치인들의 조바심에 호응해 주며 핵잠수함을 주기적으로 한반도 인근으로 배치해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북·미간의 협상이 완전히 무산된 이후 북조선<sup>1)</sup>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거침

1) 본고는 남한 사회에서 통상 ‘북한’으로 통칭하는 휴전선 이북의 사회 체제를 ‘북조선’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양국은 서로를 향해 ‘남조선’과 ‘북한’으로 호명해왔는데 이는 서로를 통일의 대상이자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로

없는 수순을 밟고 있다. 2015년 이후 북조선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개발을 가속화했으며, 2017년부터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다. 2021년 1월 9일에는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공식화했으며, 2022년 3월에는 사거리 최소 13,000km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포함하는 화성-17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한 달 후엔 근거리형 전술유도탄 ‘화성-11라’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아흐레 후인 25일 열병식에서는 신형 SLBM과 ‘대전차 미사일’을 공개했다. 또한 올해 3월 21일부터 사흘간 김정은 총비서 참관 하에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새로운 ‘수중 핵전략 무기체계’를 시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59여 시간 동안 80~150미터 잠행했는데, 수중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킬 수 있다. 공중으로 발사되는 미사일에 비해 탐지가 어려워 일단 발사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같은달 22일에도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순항미사일 4기에 대한 발사 훈련을 전개했다. 이 훈련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이뤄졌다.



동아시아 군비 경쟁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은 난세이 제도에 대공미사일 기지를 무제한적으로 증강하면서 자위대 군비를 가파르게 늘리고,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6년 3월 요나구니섬에 이미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개설해 약 16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2019~20년에는 미야코섬과 이시가키섬, 아마미오섬에도 각각 600~800여 명의 미사일부대들을 배치했다. 올해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예정이다. 일본 우익언론 <산케이신문>의 2022년 12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나하시에 사령부를 둔 육상자위대 제

15여단을 “사단에 준하는 ‘방위집단’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제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게시마섬도 군비 증강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섬 중 하나다. 큐슈섬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 섬은 여의도 3개 정도 크기의 무인도였다. 수백년 동안 목장으로 이용되던 이 섬의 군사기지화는 미군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10여 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이 섬이 160억 엔에 매입됐고,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항만과 전투기 활주로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이 섬을 미 해군을 위한 항공모함 이착륙 훈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3년도 일본의 군비는 전년에 비해 26%나 올라 방위비 예산 5조5947억 엔과 기타 항목 1조 엔을 합한 6조8천억 엔(6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해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의 1%에서 2%로 늘리겠다고 변경했다. 본격적인 재무장의 가도에 오른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올해 3월 초 국방 예산을 2021년 대비 7.1% 증가한 1조4504억 위안으로 증액했

보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는 70년째 휴전 상태인 한반도의 불안정한 조건과 통일 담론의 공백과 연결되어 있다. 본고는 통일 담론의 실패라는 냉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제언하고자 한다.

다. 이는 한국 국방비 54조6천억원의 5배, 일본의 4배이며, 그 차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선언 이후로부터 지난 10년 사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 군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일대일로와 중국몽 등 지정학적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외 정책을 추진해왔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중국의 도전은 항공모함 보유 등 해군력 현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9년 초 중국의 군사전문가 왕윈페이(王云飞)는 2035년까지 중국이 최소 6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할 것이며, 이 중에서 4척은 핵추진 항모가 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sup>2)</sup> 이처럼 중국은 장기 계획에 따라 미국의 동급경쟁자 위상을 갖추기 이전부터 열세한 전력에서도 최소한의 작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트랙 군사력 구축에 기반한 공세적 해양전략을 설계했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투기 개발과 우주정거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력 강화 역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5년 전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 J-20은 F-22, 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다. 현재까지 50기 이상이 생산·운용된 J-20은 작년부터 남중국해·동중국해 일대에 배치됐고, 미군의 F-35와 여러 차례 대치한 바 있다. (호주·일본·한국·싱가포르·태국 등도 이에 대응해 이미 F-35를 구매했거나, 살 예정이다.) 핵탄두 보유량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3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현재 약 500기에서 2030년 1천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물론 러시아(5,900기)나 미국(3,700기)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에서 핵무기 경쟁이 폭증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처럼 작금의 한반도 및 주변국 상황은 한반도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남한과 북조선 간 군비 증강은 동아시아 군비증강과 전쟁위기를 낳은 주요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중국몽(中國夢)’ 구상 등 강대국들의 세계 패권 전략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난 시기 우리의 통일 담론이 실패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증상이기도 하다. 본고는 최근 북조선 통치세력의 대외정세 인식 변화를 비판적으로 짚으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운동의 시야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또, 기존 담론이 어떤 이데올로기로 작동해왔는지 돌아보고, 어떠한 한계로 인해 좌초된 것인지 개략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상의 평가와 실천이 응당 남한 사회에 국한되어선 안 되며, 평화를 열망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실천과 조응해야 함을 피력하고자 한다.

## 북조선의 ‘신냉전’ 인식

냉전 시기 북조선은 대외 정세를 “자유진영 대 반동세력”이라는 양분된 구도로 봤다.<sup>3)</sup> 하지만 통념과는 달리 북조선이 언제나 그런 태도를 견지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중소 분쟁이 대두되었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주체사상을 정립하면서 ‘자주’를 내세웠고, 중소간 시계추 외교(Pendulum diplomacy)<sup>4)</sup>를 통한 ‘실리외교’를 추구하기도 했다.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자 김정일은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강조하면서 선군정치<sup>5)</sup>를 내세웠다. 미국과 남한 등 주변 세력이 북조선에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선제 공격할

2) Minnie Chan and Guo Rui, 「China will build 4 nuclear aircraft carriers in drive to catch US Navy, experts say」, SCMP, 2019. 2. 6.

3) 박원근,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동아시아연구원, 2023. 2. 27.

4) 냉전 시기 북조선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특유의 ‘시계추 외교’를 펼쳤다. 그런 가운데 단순히 기계적인 중립을 고수하기보다는, 분명한 기울기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했다.

5) 김일성 사후 최고령도자에 오른 김정일은 현실사회주의 붕괴 흐름 속에서 통치 질서의 물질적이고 이데올로기

수 있다는 위기의식 고취를 통해 ‘조국이 포위됐다’는 위기의식을 소환하고, ‘선군정치’를 정당화한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독재국가”로만 이해되는 북조선의 대외정책 역시 내부 통치 정당성의 확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북조선은 국제 정세를 둘러싼 담론 구조에서 전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톱니바퀴라 할 수 있다.

2022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이 “《동맹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형성하는 것”과 남조선을 포함한 적대세력의 “군사적 동태와 활동” 등을 근거로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발언했다. 특히 한미일 3각 공조를 신냉전의 핵심으로 상정하고, 오커스(AUKUS)<sup>6)</sup>, 푸른태평양지역동반자(PBP)<sup>7)</sup>, 쿼드(QUAD)<sup>8)</su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sup>9)</sup> 등을 “신냉전의 산물”로 규정했다. 또한 김정은은 이에 맞서 브릭스(BRICs)<sup>10)</sup>나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신흥경제국들이 미국 주도의 “일극화 경제체계에 도전하여 국제경제관계의 다극화를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북조선이 적극적으로 신냉전 담론을 소환하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대북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첨단 전력을 개발 및 배치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신냉전”의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한데 동시에 북조선 통치엘리트들은 “신냉전”이라는 구도와 담론을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한다. 가령 북조선은 신냉전 담론을 통해 진영화된 세계질서에 자신들의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생된 유엔안보장이사회의 기능부전을 파고들어 북조선 핵을 불법화한 매커니즘의 정당성 자체를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다극화 세계’에 대한 지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는데, 현 구도에서 ‘신냉전’과 ‘다극화’는 오히려 현 시대를 규정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원화된 구도의 양편을 가르는 구획으로 가시화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기존의 세계 질서가 붕괴했다는 담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데 새롭게 대두한 위기 담론들은 제각기 단점이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차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붕괴시킨 역사적 분수령이 됐다고 보는 입장은 러시아와 미국-우크라이나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무시하며, 냉전의 종언 및 탈냉전기 미국 단극 체제의 붕괴를 초래한 이라크 전쟁 등 여러 계기들을 의도적으로 소거한다. 다른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적 상황을 강조하는 입장들은 강대국 대결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미국의 쇠퇴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복합적인 국제관계 현실에 대한 인식을 오도한다.<sup>11)</sup> 다시 말해 미국의 일방적 견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수정주의 세

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대 중심의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군대를 중심에 둔다. (북한정보포털 및 위키백과 참고)

6) 2021년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간 군사동맹  
 7)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로, 2022년 6월 25일 출범.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일본 등 5개국이 포함돼 있고, 한국·독일·캐나다 등은 옵저버.  
 8) 4개국 안보 회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약칭.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국제 안보를 주제로 갖는 정기 정상 회담으로,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을 띤다.  
 9) 2022년 5월 23일 도쿄에서 공식 출범한 경제협력체. 한국 1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산업과 디지털 무역, 에너지 분야 등 쟁점에서 협력을 추구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차단 및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됐다.  
 10)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중심의 신흥개발국 협의체로,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대안을 지향하며 2009년 출범했다. 지난 8월 24일 브릭스는 아르헨티나·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UAE 6개국을 2024년부터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일기로 했다고 밝혔다.  
 11) 이해정,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의 민주주의 기획, 그리고 새로운 국제 (무)질서』,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2.



력이지만, 보편적인 국제법 질서를 옹호하고자 했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야말로 심각하게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수정주의 세력일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미국과 중국 모두 자신의 패권적인 힘을 남용해 기존의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선택적인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북조선이 능동적으로 ‘신냉전’이라 규정한 구도를 활용하는 대외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남한 내 주류적 논의는 대체로 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조응하자는 입장과 실리외교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둘 모두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연결된 입장은 아니다. 전자는 전후 질서 붕괴에 따른 이념화된 반공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후자는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인 합리성 논리를 뒷받침한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평화통일운동 세력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고, 북조선이라는 변수는 우리의 대외정세 인식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 그런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악마화된 대상으로서의 북조선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화된 통일 담론의 허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에서는 북조선이 보이지 않는 효과만 놓고, “우리도 핵무기 만들자”라는 반동적인 요구가 남을 뿐이다.

북조선 통치세력과 유사한 세계 정세 인식은 최근 대두되는 좌파적 신냉전론자들에게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트라이콘티넨탈: 사회연구소(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의 데보라 베네치알레(Deborah Venezia)는 신냉전 담론을 적극 활용하면서, 무너져가는 미 제국주의에 맞서 “강력한 사회주의 주권국가”인 중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남반구의 이익이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진보당을 비롯한 NL<sup>12)</sup> 계열의 정치세력 역시 이와 유사한 레토릭을 사용한다. “다극화의 새로운 시대는 우리민족의 이익에 맞게 누구의 눈치도 볼 것이 우리 스스로가 운영해야 합니다.”(2021년 8월 23일 당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하지만 ‘다극화’ 자체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신냉전적 구도를 형성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다극화 세계를 대안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한계적이다. 그것은 세계를 ‘서방 대 비서방’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비서방 국가들에서 이뤄지는 착취와 억압들을 간과하고, “국가로 환원할 수 없는 국가 내외의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연대와 연합”을 기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냉전 담론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추고 있느냐만이 아니라, 그 담론이 작동하는 논리와 양상 역시 살펴야 한다.

## 통일 담론의 작은 역사

남북 분단 이후 70년 동안 남북 양국 정부와 사회는 통일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한데 그것을 구성하는 담론은 도전받지 않는 사회적 통념으로 존재해왔고, 그 당위성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모든 시도는 쉽게 폄하되곤 했다. 이처럼 어떤 한 가지 비전이 지배적인 통념으로 위치해 있을 때에는 그 당위성이 의심받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는 억압받는 사람들에 의해 다르게 전유될 때조차 작동하며, 어느 순간이 오면 그 당위성은 도전받기 마련이다. 대중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다면, 통념이 지니는 일정한 타당성은 모래성처럼 빈약해지고 정당성 역시 장담할 수 없다. 통일 담론 역시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통일 담론은 계속해서 변화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당위를 승인받아 왔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군부 독재 시기까지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적이고 반공주의적인 것이었다면, 199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보편주의적 가치담론에 기댄 전망이 제시됐고, 외환위기 이후 우

12)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

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으로 개조되기 시작한 후에는 자본의 이윤과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부흥을 도모하려는 욕망이 크게 불거졌다.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담론의 효용성이 위협받게 된 후 2023년 현재 통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받고 있다.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1994년 40.9%(한국갤럽 조사)에서 2014년 19.9%(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의 2013년 12월 조사)로, “통일보다는 현재대호가 낫다”는 응답은 1994년 7.0%에서 2014년 16.8%로 증가했다.<sup>13)</sup> 이 시기 통일에 대한 냉담한 태도가 늘어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지목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도전하는 담론적 시도와 사회운동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도전받는 통일 담론의 통념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서린 전쟁위기의 그늘을 극복해야 한다.

통일 담론의 역사에서 가장 긴 시간, 강력하게 작동하는 기제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민족주의’이다. 역사적으로 군부를 등에 업은 권위주의 통치세력조차 신성화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국가론을 당위로 삼았고, ‘단일민족국가’를 지향했다. 진보 사학계에서조차 이는 “역사적, 필연적 과업”<sup>14)</sup>이라는 위상을 가졌고, ‘탈식민주의적 해방’라는 부수적 과업이 보태졌을 뿐이었다. 그 때문에 대중적인 통념에서도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통일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정치적 지향은 ‘민족’ 담론을 전제로 삼으며, 현실에서 여전히 소구력이 가장 크다

사회운동의 통일 담론 역시 민족주의적인 기제를 강하게 가졌다. 자민통(자주·민주·통일 혹은 NL) 그룹은 ‘민족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인식하고, ‘민족통일’이라는 지상 목표와 미제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해한다. 이에 반해 그밖의 사회운동 세력은 분단을 주요 모순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자민통 그룹이 말하는 “자주화”를 선행적 과제로 보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199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졌으며, 운동사회 내 문화적인 이질성을 낳아왔다. 이후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는 민중운동 내 이념적·문화적 차이가 심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자민통 노선이 한반도 문제를 주의주의(主意主義)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심화됐고, 비자민통 사회운동 활동가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지 않거나 쟁점적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심화됐다.

1980년대 일군의 좌파 연구자들은 남한 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체제가 아닌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분석하는 입장을 개진했는데, 이는 사회운동 내에서 민족주의적인 통일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이들의 작업은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계급적 주체로서 ‘민중’을 제출했지만, ‘신식민’이나 ‘반봉건’ 같은 내재적이고 주체적인 개혁의 대상을 실종시켰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sup>15)</sup> ‘민족 모순’을 강조하는 NL의 이론과 시각이 북조선이라는 역사적 내부이자 현실적 외부에 근거했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대칭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NL과 PD가 이론적으로 대칭되지 않는 사상적 조류를 이론의 장으로 끌어와 가상적인 대칭관계를 형성했고, ‘민족해방’ 노선의 사상이 이론주의적 타자화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한계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주의나 계급 구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에 있어서 실천과 주체를 무매개적으로 연역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주의에 근거한 통일 담론이 시민사회 안팎에서 도전받기 시작했을 때,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 담론의 보완이 이뤄졌다. 학계 일부에서는 분단체제로 인해 왜곡되고 억압된 민중의 삶을 개선하

13)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4.

14) 강만길 외 26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심지, 1997.

15) 연광석, 『사상의 분단: 아시아를 방법으로 박현채를 다시 읽다』, 나뭇잎스, 2018



고 자유와 평등이 신장된 사회로의 진보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보다 민족주의를 더 경계하는 입장에서는 “분단과 적대적 대립으로 해서 한반도 주민들의 복지, 자유, 평화, 인권, 환경 등의 가치가 위협받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한 것이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sup>16)</sup>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적인 당위성에 종속되지 않고,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런 시도는 부분적으로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의 필요성을 완전히 비판하지 않았고, 때로는 결합되기도 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과 보편주의적 통일 담론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순 없다. 1990년대 초에 창비그룹은 냉전 시대 이후 동아시아적 시각의 필요성으로서 ‘지적 주체성의 회복’, ‘일국적 변혁을 넘어선 대안문명의 건설’ 등을 제기하면서, 그 실천 과제로 한반도 통일운동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사회운동 주류를 차지하던 통일 운동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국민국가의 불완전성이라는 동아시아적 조건에 근거해 국민국가와는 다른 정치체 모색했는데, 그것이 질적 발전과 실천과의 선순환을 이루기도 전에 동아시아 담론 자체가 쇠퇴하면서 점차 망각됐다. 이는 학계의 담론적 시도가 사회 변화 흐름과 조우하지 못한 탓이다. 소련 붕괴 이후 혼돈에 빠져있던 사회운동은 동아시아까지 관심을 뺏기에는 오히려 시야가 좁았고, 이런 한계는 오늘날까지 계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韓)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같은 국가적 비전에 대해 사회운동은 추호의 의심도 품은 바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래 동아시아에서 이주 노동이 증가하고, 이주민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게 된 오늘날, ‘한민족의 동질성’ 따위는 현실과 한참 멀리 떨어진 레퍼토리일 뿐이다. 민족주의는 이제 의심받을 수 없는 통념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처럼 오늘날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이 대중적인 소구력을 상실하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 역시 적지 않게 줄어들었다. 2022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조사<sup>17)</sup>에서 통일의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은 42.3%로,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고 답한 31.6%보다 높았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이 같은 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sup>18)</sup>에서 민족기반 통일인식과 분단비용 인식의 응답결과를 보면, “남북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데에 ‘동의’(42.0%)한 비율은 ‘비동의’(20.2%)의 2배 이상이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즉, 민족주의를 근거로 한 통일 담론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취약해진 민족주의 통일 담론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담론이었다. 1995년 당시 김대중은 통일을 당위의 차원에서만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민족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이 된 후 그의 대북정책 기조는 확실히 이전과 다른 것이었는데, 경제협력 정책을 통한 교류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메커니즘으로 삼았다. 선화해-후통일의 원리에 기초한 이 ‘햇볕정책’ 노선은 1970년대 동독과 소련에 대한 서독의 경제 지원이 평화 관계를 구축했고, 결국 통일로 이어졌다는 공식을 모델로 삼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냉전 시대의 군사적 대립이 탈냉전기에는 경제적인 열전으로 대체됐다고 보고, 북조선과의 경제 협력이 앞으로 미래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라고 역설했다. 박현옥은 이것이 “북한을 남한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의 미개척지로 구상화한 것”이라고 지적한다.<sup>19)</sup> 이에 따라

16) 권혁범, 「통일에서 탈분단으로」, 『한반도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신대학교 개교60주년 기획위원회, 2001.

17) 김범수, 「2022년 통일의식조사」, 『2022 한국인의 통일의식 : 기로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9. 27.

18) 김갑식·박주화, 「한국인의 통일인식: 시계열 추세를 중심으로」, 『KINU 통일의식조사2022』, 통일연구원, 2022. 12.

다양한 버전의 시장주의적 공급사슬 재편 전략이 제출되었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민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본의 지구적 차원의 탈규제된 축적을 탈냉전기의 진리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 이래 자본이 남북한 통일의 트랜스내셔널 형태의 선봉장이 됐다”는 도발적인 규정과 함께, 이제 통일의 형태는 “민족이나 가족 화해의 문제라기보다 탈냉전 아시아의 새로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지구적 수준의 자본주의 질서를 느슨한 국경과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탈냉전 기획’과 연루되어 있다. 그가 보기에 자본이 추동하는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는 “통일이라는 규범화된 과제와 남한에 만연한 통일에 대한 회의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고리”인데, 그렇다고 할 때 이따금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이벤트는 남아있는 열망을 “인간적 비극의 스펙터클로 바꿔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통일에 대한 비호감 혹은 불안감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박현옥은 남·북과 한인디아스포라의 지구적 자본주의적 통합이 낳은 경제적 우려에서 기원한다고 분석한다. 실제 다양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아도 ‘통일비용’과 ‘경제적 부담’을 비호감의 이유로 꼽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이런 추세는 남한 경기 상황에 비례하고, 시간이 갈수록 우려의 정도는 대체로 심화된다. 그러니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기존의 통일 담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햇볕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잠재성

기실 통일 담론은 반공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위치에서건,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 위치에서건 신자유주의 세계화 원리에 의해 잠식된 것이 사실이다. 어느 쪽이든 통일의 ‘경제성’ 원리가 논거로 활용되며, 양대 기득권 정치세력은 유불리에 따라 통일 담론을 활용한다. 따라서 경기의 변동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는 심지어 통일운동 진영에게도 활용되었으며, 박근혜식의 ‘통일대박론’은 결코 반공 우파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과거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정부는 통일 담론을 일종의 신자유주의적인 통합시장 담론으로 뒤바꿨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공존과 경제통합을 ‘사실상의 통일’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단계는 남북 간의 무역자유화로, 북조선을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조업 생산기지(가공무역형 수출기지)로 전환하고, 남한 경제의 하위 파트너로 통합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와 자본은 언제나 “풍부한 저임 노동력”으로 표현되는 북조선의 조건에 한껏 기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한미 간의 역할 분담론과 정치-경제 분리정책을 제시했다. 즉 군사안보 대응은 미국이 주도하고, 남한은 북조선과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 변화와 무관하게 남한 자본이 북조선을 통해 교역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은 남한의 자본주의 질서의 확장을 지지했고, 자본의 지지의 밑거름 삼을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와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는 신자유주의화된 통일 담론, 평화공존 해법을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구상이라고 지칭하기는 민망하다. ‘평화’라는 외피를 활용해 ‘2국가 1체제’라는 흡수통일 효과를 획득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자민통 그룹에 속한 활동가들조차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매우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선전하며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동원해오지 않았던가.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통일담론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는 간과할 수 없는

19) 박현옥, 『자본의 무의식 : 자본주의의 꿈과 한민족 공동체를 향한 욕망』, 천년의상상, 2023

문제다. 박현옥은 이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데올로기에 잠식된 통일 담론의 양상을 ‘한인 디아스포라’를 다루는 여러 방식들을 통해 설명한다. 가령 조선족 이주민들이 1990년대 이후 남한으로 이주해와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재외동포법 제정 등의 요구는 (박현옥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배상의 정치학’이 활용되었다고 분석될 수 있다. 이를 탈북민들이 맞닥뜨린 현실에 비추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탈북민들은 남한에서 손 쉽게 ‘반공 프로파간다’와 ‘탈북 마케팅’에 활용되며,<sup>20)</sup> 동시에 노동시장의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착취 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기실 누군가에게 탈북은 사실상 “사업”이 됐으며, 탈북민은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먼저 온 통일”이 되기도 하고, ‘귀순용사’가 되기도 하며, ‘거래의 대상’이나 ‘간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통일은 실로 권력자들에게는 위기 극복의 방안이, 당사자들에게는 비참한 비전이 됐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의 한계’가 북핵 문제 해결의 총체적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의 평화공존론은 동아시아 권역의 질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부였고, 시민사회 전반은 이에 무비판적으로 호응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했다. 이는 남한 사회운동이 해당 시기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혁신된 사회변혁 이념과 노선이 과소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북조선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화려하게 시도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사이자 중재자를 자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 매과들에 의해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그해 여름 판문점 깜짝 만남에서의 약속이 모두 위반되면서 장밋빛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런 결과를 보고 마냥 “미제의 음모”만을 탓할 수 있을까?

남한의 양대 정치세력은 북조선 문제를 여전히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습득하고 유지해온 관성대로 접근한다. 반공주의 우파는 내내 흡수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북조선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공허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자유주의 우파는 신자유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통일 담론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조선에 도와주고 북조선의 군사적 위협(핵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접근법을 추구한다. 표면적으로 양 세력은 현실 정치와 대외 정책에서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하고 굶주리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설정해 소비하고, 강력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과거의 북한’만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정옥식은 냉정하게 전자(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를 맹목적 친미주의로, 후자(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를 공미형 친미주의라고 비판하는데,<sup>21)</sup> 어느 쪽이든 지나친 대미 저자세와 친미주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이후 진보적 사회운동은 대체로 진보언론들과 정권이 함께 조형한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고, 이를 수용해왔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좌초해버린 이후에도 독자적인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고별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사회운동 일각<sup>22)</sup>에서는 북조선의 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대안적 입장이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이원론적인 담론 안에서 반공우파 대북노선의 세부항목에 동조하는 등의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를 감성적 코드로 접근하며 국내정치용 선전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은 일리있지만, 북조선이 돌발 행동을

20) 문영심, 『탈북 마케팅 : 누가 그들을 도구로 만드는가』, 오월의봄, 2021

21) 정옥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2023, 서해문집

22) 사회진보연대, 「북한 정권이 문제다. 남한 사회운동은 정세를 직시해야 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0. 6. 18.

을 취할 위험성을 강조하고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외침만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적 대안”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다. 더구나 이는 자신이 비판해 마지않는 통일운동 그룹의 편향적 노선과 마찬가지로 이원론적 구도에 스스로를 가둔다. 중국의 군비 증강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전개하는 군사 전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운동 그룹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후자에 대한 비판이 전무하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비판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기실 한반도 문제 해법을 둘러싼 하나의 논쟁 사이클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혹자는 현재 국제 질서를 “알타체제 해체”라는 틀로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아시아 정세를 비판적으로 진단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서구적 자유주의’와 ‘중국식·러시아식 권위주의’라는 두 가지 선택지 밖에 남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한다. 2014년 홍콩 우산운동(雨傘運動)이나 대만 해바라기운동(太陽花運動) 등의 사건들이, 같은 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유로마이단(Євромайдан)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진핑의 길’에 대당한 ‘서구적 자유주의 권리 지향’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sup>23)</sup> 하지만 해바라기운동은 신자유주의적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이기도 했다. 또한 2019년 6월 홍콩에서 폭발한 범죄인 송환조례 반대운동이 내재한 사회적 모순을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로 보인다. 당시의 대중 여론의 다양한 분기를 ‘중국식이나, 서구식이나’로 대당시키는 것은 사태의 복잡성과 대만·홍콩 사회에 잠복한 정치경제적 모순을 감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중국식이나, 서구식이나’라는 이원론적 선택지에 갇힌 사회운동 내의 한 분과가 대안체제를 지향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고 비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홍콩과 대만 시민사회에겐 오직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 너머가 존재할 수 없다고 암묵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론적 비판주의”보다는 냉소주의적 언설일 뿐이다. 대만에는 (한국 사회운동이 그렇듯이) 노동당식의 친중좌파 노선도, 민진당식의 서구 자유주의 노선도 아닌 보다 급진적이고 사회운동적이며,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노선 역시 존재한다. 이는 2019년 홍콩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홍콩에서는 홍콩민족주의에 기댄 급진적인 반중 항쟁 노선이 아니라, 전 도시적인 노동자 조직화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적이고 좌파적인 경향도 존재했다. 일국양제의 불안정한 조건은 더 이상 이를 지탱하기 힘들게 만들었지만, 홍콩 항쟁을 이끌던 민간인권진선의 사회민주연선과 공당, 직공맹(香港職工會聯盟) 등 핵심적인 활동가 집단이 이런 지향을 갖고 양대 패권 전략 혹은 그것들에 기댄 정치적 경향에 공히 비판적이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모종의 ‘도미노 이론’<sup>24)</sup>처럼 한국 사회의 선택지 역시 ‘친중’과 ‘친미’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겁박을 강화하는 효과만 발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위기 현상들은 모두 국제적인 정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기도 상호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위기는 없다. 하지만 대중봉기에 대한 진단을 단순화시키면, 향후 정세에 대한 진단 역시 단순화시키고 정치적 선택지를 좁힐 수밖에 없다. 위기의 시대에 사회운동의 선택이 ‘어떤 야만이 좀 더 낫냐’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운동과

23) 백승욱, 『연결된 위기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알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의힘, 2023

24)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도미노 효과로 주변 국가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냉전 시기 미국에서 유행했던 지정학적 견해다. 도미노 이론을 제기한 냉전주의자들은 한 지역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주변 국가가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동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사회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려는 군부 등의 방침을 지지했다. 미국이 베트남에 무리하게 개입해 침공한 것 역시 이것에 기반한 것이었다.

대안에 대한 총체적 부정과 이데올로기적 기각을 드러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광복절 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내놓으면서 “북한의 비핵화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담대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전제(비핵화)와 경제적 실익이라는 떡고물을 제안하는 내용의 재탕일 뿐이었고, 북조선 입장에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 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라며, 자신이 주창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피아구분법을 한반도 문제 해법과 연결 지으려 시도했다. 한국적 맥락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정치 체제라는 의미와 더불어 반독재와 반공을 지칭한다. 그런 점에서 ‘담대한 구상’은 실현 의지 없는 내부용 구호에 불과해보인다. 실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문에서 ‘담대한 구상’이 “‘비핵·개방·3000’<sup>25)</sup>의 복사판에 불과”하며, “‘비핵화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시기 여러 시도의 실패로부터의 학습이 없는 정책의 뻘한 귀결인 셈이다. 일각에서 대북제재 해제라는 과감한 조치가 병행됐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결국 북조선은 “각자 갈 길 가자”는 식으로 남북관계를 정리한 듯하다. ‘담대한 구상’은 레토릭만 화려한 잣더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북 문제는 비단 정부 정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중조직과 지역사회가 한반도 질서를 인식하는 시각을 관통하며, 우리 사회 전체의 주요 쟁점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되고 남북 관계가 수렁에 빠져들수록 사회운동은 보다 명민하고 성찰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입장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친북이나 반북이나’ 혹은 ‘친중이나 친미나’의 선택지 안에 우리의 정치철을 가둬선 안 된다.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대안 체제의 상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 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날 한반도 평화는 점차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는 동아시아 전역의 전쟁위기 국면을 높고도 마찬가지다. 사회운동은 다시 자신의 지향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통일 담론의 종언에 대한 인식, 반전평화운동의 재점화, 한반도를 넘어 권역적 사고와 실천, 북조선 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통일 담론은 민족주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담론에 머물렀고, 보편가치를 지향하는 담론은 자신의 정합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상술했다시피 과거 경협 프로젝트는 비일관적이었고, 그 한계도 명확했다. 기본적으로 경협은 경공업 저임금 노동력을 동원해 남한 자본의 비용을 감축해 이윤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했다. 그런 점에서 남북 경협은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딸린 갈래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에 의한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발전주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

25) 2006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 구상. 정치안보적 상황으로 인해 핵 폐기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최우선 명제가 되었고,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됐다.

담론의 열망은 이미 시효가 만료됐다. 즉, 통일 담론은 보수파적 논리에서든, 진보파적 논리에서든 모두 파국을 고했고, 지난 정권 하에서도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파국적으로 종결됐다.

통일 담론이 종언을 고한 지금,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동아시아 전쟁위기를 넘어 평화를 구축하는 일의 출발점이 ‘통일’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통일 담론이 오히려 평화공존의 전망을 은폐하는 효과를 인식해야 한다. 본고에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하는 의미에서 ‘북조선’이라고 호명한 것, 역사적 통일 담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두번째 과제는 반전평화운동의 재점화이다. 전쟁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이 불가역적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사회운동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실천해야 할까? 우선 핵무기 반대와 전쟁 위기에 맞선 대중적 반전평화운동의 필요성은 사회운동이 견지해야 하는 원칙이다. 정욱식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북조선 통치세력의 대외 인식은 상당히 달라졌는데, 북조선 지배세력은 이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을 접었고, 더 이상 핵 협상을 평화협정 체결 및 경제 제재 해소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핵무력을 자신의 ‘국체’로 삼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새로운 북한’은 대북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으며, 잠시 뜨거웠던 남북관계의 추억을 접고, 한반도를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을 진정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실패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사실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주장은 “우리(남한)도 핵무장을 하자”는 국가주의적 논리다. 이러한 논리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불허로 인해 실현되기 어렵지만, 동시에 한반도 인근에 핵무기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4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즉, 한반도에 자신의 핵전략잠수함(SSBN)을 자주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고, 자해적 조치가 될 공산이 크다.

‘비핵화’는 표면적으로 누구나 지지한다고 말하는 원칙이다. 문제는 약속과 수순이다. 실제 지난 2021년 11월 북미 간에 이뤄지던 종전선언 협상에서도 ‘비핵화’ 문구는 막판까지 전개되던 이 협상을 파토낸 가장 중대한 쟁점이었다. 궁극적으로 “비핵화’는 물건너갔다”고 보는 게 냉정한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를 포기해야 할까? 사회운동은 “여전히 그래선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을 포기한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북의 핵무장 완성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이 될진 몰라도,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겐 크나큰 불행일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군비 감축을 도모해야 한다. 이때 정욱식은 ‘비핵화’ 개념 대신 ‘비핵무기 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sup>26)</sup> 개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비핵화’란 한 번도 제대로 정의된 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논의의 주체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며, 기존의 논의에서 그것은 완전히 해결 불가능한 난제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핵무기 지대’란, 특정 지역내에서 국가간 조약에 의해 핵무기의 생산·보유·배치·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NPT상의 5개 핵 보유국들이 비핵지대 조약 당사국에게 핵무기 사용 및 위협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는 핵 군축 방식을 지칭한다. 이때 목표는 해당 지역내에서 핵무기를 배제함으로써 핵전쟁 연루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다. 상기한 목표를

26) [편람] 비핵지대(NWFZ) 관련 주요 이슈 [https://www.mofa.go.kr/www/brd/m\\_3989/view.do?seq=304148](https://www.mofa.go.kr/www/brd/m_3989/view.do?seq=304148)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핵 보유국의 NSA 제공과 검증체제 구비가 중요할 것이다. 이를 한반도로 좁혀서 보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밖에 한반도 밖 핵보유국들이 남북에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보장하는 것을 지칭했었다. 물론 이런 합의 역시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길게 봐도 지금으로서는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정욱식은 “전쟁 방지나 긴장 완화·상호간 위협 감소 조치 등 여건을 하나씩 만들고, 군축이나 제재 해결 등 과제들을 시야에 넣은 채로 추진해나가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핵심은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꼬여버린 기존 ‘비핵화’ 담론 대신, 보다 이완된 목표를 추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축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비핵화’라는 오래되고 실패한 프레임 안에서 악무한의 논전을 지속하기 보다는, 군축과 평화협정이라는 비전을 위해 단계적인 로드맵을 대중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 군축과 평화 운동의 담론을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국제 정세와 무관한 이슈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면 전 세계적에서 편향적으로 핵무기 개발하는 한쪽의 문제가 동반된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국제적 비핵 질서와 연동시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당장 핵무기를 갖냐 아니냐라는 목표가 아니라, 단계적인 군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과 맥락에 대한 설명 역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결코 기존의 발전주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담론으로는 보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다시 국제적이고 권역적인 모순에 대한 일국적인 대응으로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주를 한반도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고, 동아시아 민중운동 전반의 지향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난세이 제도에 무제한적으로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핵무기를 1천 개까지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군축이나 남한 내 시야에 머문 평화운동 수사가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중기적으로 동아시아 평화공존 체제를 확립하는 것만이 ‘민족통일’이라는 비전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논의 틀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단계는 두 국가로의 완전한 정착 혹은 북핵국가로의 전화 등으로 열린 결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단일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오래된 몽상에 가두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는 대결구도를 절대적으로 평화적인 정세로 바꿀 수 있다. 한반도 핵문제를 단순히 동북아시아나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세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지양을 위한 관문으로 여긴다면 말이다.

세번째 과제는 한반도를 넘어 한반도 평화 문제의 시야를 획득하는 것이다. 북조선 체제를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의 차이는 명확하다. 전자는 과거의 통일담론이 노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진보적인 지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현실의 권력구조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개의 국가 체제를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다. 통일 담론이 남한의 자본 침략 논리로 확대된 것이 이미 예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논의가 최소한 권역적 사고틀로 확장되어야 하는가? 백영서 등

연구자들은 2010년대에 실천 과제에 대한 질문을 재차 제기하며 “동아시아의 핵심현장”으로 “중화제국-일본제국-미제국으로 이어지는 중심축 이동에 의해 위계지어진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모순이 응축됐고, 식민과 냉전이 포개진 영향 아래 공간적으로 크게 분열되어 갈등이 응축된 장소”들을 제기한 바 있다.<sup>27)</sup> 오키나와(沖縄)와 진먼(金門), 개성 등을 통해 ‘이중적 주변의 시각’을 갖고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자는 것이다. 이 세 곳 중 오키나와는 20세기 역사 내내 동아시아 질서의 얼룩처럼 존재해왔고, 이는 진먼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 2000년대 이래 제주 해군항이 건설된 강정마을은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주요한 장소로 부상한 바 있다. 이런 장소들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실천 거점으로 여전히 유의미한 질문을 남기고 있다.

남한 사회운동은 ‘통일’이라는 틀은 민족주의 담론에 갇히고, 발전주의적 대안 제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담론의 주체를 ‘민족 번영’이라는 지향에 가두어놓고 비전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운동은 ‘통일 담론’에 갇혀 있지 말고, 동아시아 평화공존체제 담론으로 이동하고, 창고에서 지난 시기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해 나눈 무수히 많은 담론을 상기해야 한다. 남북 평화를 위해 전개되는 기존의 모든 실천이 통일 담론에 흡수된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사드배치 반대운동이나 한반도 종전선언운동 등의 실천들이 과거의 통일 담론이 아니라, 다른 지평 위에 놓이도록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복합국가론’<sup>28)</sup>은 중장기적 전망이 필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시야를 제시한다. 복합국가는 단일국가 성립 이전에 남과 북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한도 내 한 민족이 한 덩어리로 엮히는 국가 형태를 지칭한다. 즉, 국민국가와 대당되는 개념으로, 자민족중심주의와 국가주의의 폐해를 경계하면서도 선부른 반국가주의의 편향을 범하지 않도록 창안한 것이다. 이러한 복합국가론의 문제의식을 지역 차원에 확대 적용하면 한반도 변혁을 동아시아의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정치 연구자인 하바 구미코(羽場久美子)는 2022년 5월 『주간금요일(週刊金曜日)』 기고 칼럼을 통해 “오키나와나 대만을 축으로, 비정부 기구 차원에서 환경·안전보장·평화의 문제를 고민하는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sup>29)</sup> 그는 냉전 한복판이던 1975년 유럽의 사회단체들과 지방도시들이 선도적으로 「헬싱키 선언」을 천명하고 CSCE(유럽안전협력회의)를 설립했던 것을 사례로 들면서,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역시 오키나와를 평화의 허브로 삼아 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는 이런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태세를 다지고, 오키나와든 강정이든 진먼이든 국경을 넘어서선 아래로부터의 반전평화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한과 일본, 대만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는 양국의 군비 경쟁 논리가 잠식하는 시민사회 내 논리를 비판하고, 오키나와와 대만 시민사회의 연대는 난세이 제도 일대의 군비 증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끝으로 사회운동은 북조선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가능한한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 북조선 사회에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여정이 금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운동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한 사회를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까지 남한 사회 지형에서 그것은 강력한 친밀감 내지는 대상화시키는 어떤 것으로 취급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해와 연대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 전망과 비판적 시야 속에서 북조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개선해야 하며, 반공주의나 민족주의로 수렴되지 않고, 대안 체제를 지향하는 논거를 확인 및 제시해야 한다. 아마

27) 백영서,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2013.

28) 천관우, 「민족통일을 위한 나의 제언」, 가톨릭종합월간지 『창조』, 1972. 9.

29) 羽場久美子, 「中国の封じ込めではなく共同を 沖縄を平和のハブとしてアジアと結ぶ」, 『週刊金曜日』, 2022年5/13号



도 이것들 중 가장 인접한 과제는 탈북민 주체와의 만남일 것이다. 그간 남한 사회가 탈북민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반공주의 프로파간다의 도구나, 혹은 가장 밑바닥의 저렴한 노동을 담당하는 부품 짚으로만 취급하곤 했다. 때로 탈북민들은 인종주의화된 차별의 벼랑 끝에 서기도 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시기 함흥에서 자라 열일곱 살 때부터 군 생활을 했던 탈북민 당사자 주승현에 따르면, 남한 주류 사회는 탈북민을 끄찍하게 도구화한다. 주류 언론들은 탈북민들을 상품화하고 반공주의적 모델로 연출해왔고, 노동시장은 극심한 경쟁주의로 얼룩져 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여타의 탈북민들, 남한의 경쟁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남쪽도 북쪽도 선택할 수 없어 제3국으로 가 난민이 된 사람들, 또 분단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사고하다 북한에 갔다가 고통받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조난자들”이라고 일컫는다.<sup>30)</sup> 사회운동은 이 조난자들과 만나야 한다. 남한 사회가 탈북민과 관계를 맺는 새롭고, 평등하며, 모범적인 방식을 가시화해야 한다. 이는 미래에 남한 사회와 북조선 사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교류할 수 있는 준거틀이 될 수 있다.

고통이 예견되는 미래는 막연하게 현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기억함으로써만 변화시킬 수 있다. 매우 요원해보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국내에서 무수히 많은 논쟁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이제 체제전환운동은 다양한 주체들과 실천의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데,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남한 시민사회 및 대중조직에서의 복합적인 ‘재인식’은 이런 재구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민중의 평화는 아래로부터의 반전평화 대중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가주의적 프레임이 민중의 안위를 위협할 때조차 마찬가지다. 한반도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남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그 출발이다. ‘민족’이라는 이름 안에 묶이지 않는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포괄되고, 노동권과 평등, 민주주의가 약속될 수 있는 ‘어떤 통일’의 미래는 평화공존 체제가 수립되고 양국 시민들에 의한 상호교류가 완전히 가능해질 때, 완전히 해체된 통일 담론의 붕괴된 폐허 위에서 제로부터 생각해도 늦지 않다.

---

30) 주승현, 『조난자들 :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에 관하여』, 생각의힘, 2018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이 아닌 노동자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반제반전 운동을 만들어 나가자.

## 1. 노동자 국제주의의 원칙 아래, 미국, 서방 제국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 제국주의 진영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다.

=박기형 동지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택일해야하는 위치에 서 있다'며,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약소국들의 제 3의 움직임이란 것도 결국은 강대국 중 어느 편에 붙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지요. 이런 '국가중심적 시각'을 넘어서려면 국가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상호교차의 선들("계급, 젠더와 퀴어, 장애, 생태 등")을 묶어낼 연합의 기획과 실천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해했습니다.

=홍명교 동지도 비슷하게, '신냉전'과 '다극화'는 "이원화된 구도의 양편을 가르는 구획"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패권적 힘을 남용해 기존의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선택적인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하였고요. 미 제국주의에 맞서 "강력한 사회주의 주권국가인 중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트라이콘텐탈의 주장을 비판하였습니다.

=저는 미중 패권대결에서 어느쪽을 지지하는 것도 노동자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제자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미국 단일 헤게모니의 시대가 저물고, 미중 패권대결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대 축 사이에 끼어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을 줄타기하는 다극체제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극화 체제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온갖 종류의 분쟁과 국지적 전쟁을 일으키는, 혼돈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윤석열식 맹목적 친미주의와 민주당식 실리외교가 정세를 따라 경합하듯이, 국가의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중 패권대결 속에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 어느 것도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중 양대 제국주의 국가의 패권대결 속에서 어떤 쪽에 붙는 게 ‘우리 국가’의 생존에 유리하냐”라는 질문을 던져서는 절대로 다가오는 동아시아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명교 동지께서 짚어주셨듯, 한미일북중러, 동아시아를 둘러싼 모든 국가가 전례없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군비증강은 문제인이나 윤석열이나 관계없이 일관되게 이뤄졌습니다. 박기형 동지의 지적처럼 국가단위의 해결책을 아무리 고민해봐야, 제국주의 국가 간 패권대결이 심화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 제국주의 전쟁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각 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총부리를 자국의 자본가계급에게 겨누자는 “혁명적 패배주의”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중추 역할을 하던 독일사민당부터 사회주의 강령을 배반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노동자민중과의 전쟁에 찬성했습니다. 유일하게 러시아의 볼셰비키만이 혁명적 패배주의에 입각해 제국주의 전쟁을 자국 자본가계급을 향한 내전으로 전환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다가오는 제국주의 간 패권전쟁

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할 원칙은 100년 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 진영도, 중국 제국주의 진영도 모두 자본주의 국가 간 패권대결로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주변이자 전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둘 중 어느 진영에 서야한다는 일체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노동자민중은 양 제국주의 패권세력에 맞서, 특히 전쟁을 불러오려는 자국의 지배세력에 맞서 투쟁하며 국제적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 2. 한미일 군사동맹과 대규모 전쟁연습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과 함께,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입장을 가져야 한다.

=8월 대중, 대북 견제 목적의 한미일 정례 연합훈련을 약속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9월 북러 정상회담과 북한의 러시아 군사장비 지원, 최근 남한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정지 선언과 북한의 파기선언 등 사건들이 보여주듯, 동아시아에서는 날이 갈수록 한미일, 북중러 각 진영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한의 운동세력으로서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대규모 전쟁연습을 단호히 반대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자국의, 그리고 자국이 속한 진영의 전쟁행위를 단호히 거부하고 맞서는 것은, 한미일의 전쟁행위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북중러의 노동자민중과 연대를 건설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좌파운동이 오랫동안 실천적 과제를 뒷전에 둔채, 반제반전평화운동을 민족주의적 통일운동 진영에게 내맡겨두었다는 자기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민족주의와 다른 노동자 국제주의 관점에서의 반제반전 운동의 기치를 분명하게 내걸고 운동을 조직해야한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이런 진영 간 동맹 재편은 오랜 고립을 뚫을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중러 제국주의라는 뒷배를 가지게 된 북한은 앞으로 더욱 과감해질 것이고, 중러의 묵인·승인 아래 핵개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제국주의에 맞선 약소국으로서가 아니라, 북중러 동맹의 하위파트너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교 동지가 이야기하셨듯이 ‘자민통’ 그룹은 미제에 대한 억압으로부터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미제국주의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비판하지만, 그 맞은 편에서 북중러 진영이 마찬가지로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지점은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본가 정치세력의 담론인 반공주의적 통일론과 신자유주의적 통일론에 대한 발제자의 분석에 공감하며, 이에 대해선 말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제반전 운동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통일운동 세력이 기반한 민족주의적 통일운동의 담론을 넘어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 제국주의에 맞서 방어하는 것은 반동적인 북한의 체제나 정권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자민중입니다. 우리는 특히 북한 정권의 핵무장이 노동자·민중의 반제국주의 국제연대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합니다.

=특히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례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듯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대량살상무기라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일본·미국의 노동자·민중에게 무차별 대량살상 위협을 가하며, 따라서 한미일 진영에서 미 제국주의에 맞선

국제연대를 향해 북한의 노동자·민중과의 단결을 만들 가능성을 매우 크게 차단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 제국주의에 맞선 북한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하지만, 북한 정권의 핵무장에는 반대합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리비아가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초토화당한 만큼 북한의 핵무장은 미 제국주의에 맞선 불가피한 자위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핵무기가 없는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민족해방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 또한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를 가진 소련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힘은 민족해방 전쟁의 정당성으로 미국의 노동자민중을 파고들고 미국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위기 상태로 몰아넣은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전쟁 명분을 극대화해 주면서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고 했을 때, 북한의 핵무장은 완전히 잘못된 반동적인 정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주성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국제적인 단결과 대중투쟁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올바른 정치입니다.

=다시 말해 운동진영에서 한미일 동맹에 대한 단호한 반대와 함께, 북중러 동맹이 전쟁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단호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군비증강,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한미일 군비증강과 마찬가지로 지지할 수 없다라는 전망을 분명히 해야만, 국경을 넘어선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단결이라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가는 길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한반도의 전면적인 비핵지대화,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체제와 자유왕래 실현, 미국·러시아·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핵무기 폐기를 위해 북한의 노동자·민중과 함께, 나아가 전 세계 특히 일본·중국·미국·러시아의 노동자·민중과 함께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반제반전 운동,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홍명교 동지가 말씀하신 통일담론의 종언, 반전평화운동의 재점화, 한반도를 넘어선 권역적 사고와 실천, 북조선 사회에 대한(북조선 노동자민중에 대한) 이해와 연대라는 제안에 공감하면서,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반제반전 운동 건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실천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 (1) 한미일 군사동맹과 대규모 전쟁연습에 대한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연일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에 맞서는 공동실천은 (전진이 그간 실천투쟁을 해오지 않아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잘 조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간 반제반전 투쟁의 과제를 뒷전으로 미뤄온 우리 조직의 한계를 먼저 반성합니다. 내년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고, 전쟁연습은 더욱 정례화되고 빈번해질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미일 정상들의 회담, 한미일의 대규모 전쟁연습, 미군 핵항모의 입항 등의 사건에 맞춰 이를 규탄하는 여러 형태의 실천투쟁을 함께 조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투쟁과정에 노동자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조직하고, 나아가 같은 한미일 동맹 속에 있는 미국, 일본의 노동자들의 반제반전 운동과 연대를 조직함으로써,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반제반전

운동을 좀 더 구체화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하며, 기존의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연결시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 자스커지 노동자와 연대한 학생들을 향한 중국 당국의 탄압에 홍명교 동지가 국내에서 연대캠페인을 벌였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일 동맹에 맞선 반대투쟁은 특히 북중러 노동자민중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단결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실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대 제국주의 진영이 서로를 핑계삼아 군사력을 팽창시킬 때, 자국의 군사적 팽창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그 고리를 끊어내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 (2) 한국의 군사적 팽창과 대규모 무기 생산, 수출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자

=한국은 예멘내전 개입국,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개입국, 이스라엘과 같은 직접적 분쟁국을 망라해 무기수출을 확대하며 제국주의 전쟁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와 같은 방산전문기업은 국가적 지원아래 육해공 방산산업을 아우르는 군산복합체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나, 다수 대중에게 이는 '국위선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제주의 반제반전 운동과 함께 무기수출 중단요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ADEX무기수출 박람회 앞에서 플랫폼c, 참여연대 등 '아텍스 저항행동'이 시위를 벌인 것도 의미있는 실천투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경로와 현황을 더 폭로하고,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더욱 쟁점화하고 확대해나가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3) 세계적 반제반전 평화운동의 흐름과 함께,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집을 때려부수는 현대건설기계 중장비 수출중단 투쟁을 조직하자.

=전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16일,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연맹'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촉구한 이후,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자본을 타격하며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영국, 미국, 스페인 등지의 군수공장 노동자들과 항만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판매와 선적을 거부했고, 인도에서는 모든 주요 노동조합이 인도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들에게 이스라엘 제품 불매운동과 화물취급 거부를 호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반대와 함께, 현대건설기계의 중장비 수출 반대투쟁은 반제반전 운동과 노동자운동을 연결시키는 주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기계에서 이스라엘에 판매된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집을 때려부수고 있습니다. 현대 굴착기는 단지 건설장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확대 프로젝트의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전쟁범죄 수단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현대건설기계를 향한 보이콧을 호소하고 운동을 이어왔습니다. 현대 자본과 연계되어있는 노동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노동자들과 함께 현대건설기계의 중장비 수출에

반대하는 운동을 조직함을 통해, 노동자운동 속에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반제반전 운동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이런 운동을 조직해나가는 데에는 기존 노동자운동의 조합주의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국제질서의 변동과 사회운동의 공간>은 요동치고 있는 국제질서를 ‘전후 질서 붕괴론’과 ‘신냉전’으로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두 논리가 지닌 정치적 의도를 넘어선 제3의 공간을 발견하고 그 지점에서 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발표자에게는 ‘전후 질서 붕괴론’이나 ‘신냉전’ 모두 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신냉전’이라는 담론장에서는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사이의 블록화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전후 질서 붕괴론’의 경우에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과연 ‘전후 질서’로서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발표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담론장이 만들어내는 효과이다. 이는 ‘신냉전’이라는 담론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서로 경쟁하는 국가 내부의 불평등의 문제를 숨기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과 국가라는 틀 내에서 생각하게 한다는 문제 등으로 포착가능하다. 비슷하게 ‘전후 질서 붕괴론’의 경우에는 마치 ‘신냉전’ 담론을 반박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 엘리트들이 설정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수사를 변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위의 두 담론은 국가 중심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1) 안보를 국가의 생존이라는 틀로만 해석하게 하며, 2) 국가 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배제하고 강대국의 게임으로 살펴본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단순히 국가 차원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국가-지역-사회 등을 가로지르는 복잡한 교차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중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사회운동의 공간을 질식시킬 위험성마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발표자가 가능성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국가 중심적 사고의 전환이며 이를 위한 돌봄 정치의 실현이다. 주체의 상호의존성에 주목하여 “비폭력에 근거한 새로운 윤리-정치”를 발명하며, 이에 기반을 법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돌봄의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상호성이라는 존재론적 규범을 복원함으로써 돌봄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윤리-정치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실 토론자는 발표자의 논지에 특별한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평소에 신냉전이나 전후 질서 붕괴론 등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비판적으로 생각해온 터라 이번 발표문이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 질서의 변동과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결 부분을 좀 더 설명해주셨으면 한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금 ‘윤리성’을 주목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실천으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백하자면 토론자도 ‘주체의 윤리성’, ‘돌봄 정치’, ‘상호연결성’ 등을 몇몇 원고에서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구체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결국 주체의 상호 관계성 등을 강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현실적 수준에서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중위 수준에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돌봄 정치’가 논의하는 상호연결성 등은 다른 측면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주의적 주체라는 기본 틀을 재생산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도 기억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상호연결성과 불안정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개입과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에 대해서 발

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주체의 파편화가 가속화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는 돌봄 정치라는 말이 하나의 레토릭으로 머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사회운동의 위기라는 진단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소멸되는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도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 잠깐 언급하신 국제 사회의 협력 규범 등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제 사회가 다양한 규범 장치들을 고안해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 통상, 환경 등의 여러 규범들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마치 세계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다른 문화나 맥락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사회운동,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자> 발표문은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짚어내면서 ‘신냉전’과 ‘다극화’로 대변되는 국제 정치 지형이 세계 패권의 전략이자 동시에 통일 담론이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사회운동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통일담론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의 비판으로 등장한 평화 및 탈분단 논의가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의 필요성을 완전히 비판하지 않았고 때로는 결합되기도 했다”고 분석한다. 한편 최근에 들어서는 민족주의적 논의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자 신자유주의가 통일담론과 결합하는 양상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자본이 추동하는 트랜스내셔널 코리아가 새로운 통일 상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대중-노무현의 평화공존론이 신자유주의적 동아시아 재편 기획의 일부였음을 강조하면서 이후 남한의 양대 정치 세력은 북조선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구조를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구태의연한 접근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발표자는 1) 통일담론의 종언에 대한 인식 제고 2) 반전평화운동의 재점화, 3) 한반도를 넘어 권역적 사고와 실천, 4) 북조선 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평소에 기존의 통일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터라 발표자의 논지가 반가웠으며, 대부분의 주장에 크게 이견은 없다. 다만 몇 가지 보충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기존의 통일담론 혹은 통일운동의 민족주의적 경향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평화운동 혹은 탈분단 논의를 짧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평화운동이나 탈분단 논의는 탈냉전의 상황에서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지다가 북한의 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아시아 논의가 현실과 조응하지 못하고 수그러들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토론자의 입장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한반도에서 분단은 현실적 조건인데, 이것을 ‘평화’ 혹은 ‘탈분단’과 같은 방식으로 전유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군사적 위협이라는 조건 아래 지속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탈분단’이라는 시도가 일정 부분 통일운동의 질문이나 보충 정도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남북 분단이 현실의 조건으로 지속되는 한 이것이 담론적 힘을 갖거나 혹은 실천적 지향으로 가시화되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이라는 집단 정체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등장으로 인해 분단 문제가 지속적



으로 망각되어 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평화 혹은 탈분단이 정체성의 정치와 결합하여 작동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이러한 질문은 현재 사회운동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운동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둘째,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사회운동의 지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셨으면 한다. 반전평화운동(군축과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한다. 하지만 역으로 한국 사회에서 반전평화운동이 왜 지속적으로 실패(?)해 왔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반전평화라는 인류의 의심할 수 없는 지향이 한반도라는 맥락에서는 왜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것을 한반도 비핵화 시도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은 일견 적실하지만 동시에 근월에서 작동하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신화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로운 수단에 의한 평화가 한반도에서 상상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며, 그 기본적 조건을 깨기 위한 사회운동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천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북조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갖고 있다. 한국사회의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북조선과의 충분한 대화나 연대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시한 북조선과의 연대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탈북민과 관계맺기를 제안하고 있는 지점은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 내의 접촉면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권역적이지도 그렇다고 트랜스내셔널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탈북민과의 동등한 관계맺기는 이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며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을 두고 이뤄지는 진영 논리나 정치화에 대해서 결연히 저항해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북조선 사람들의 삶을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들과 교통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북조선이라는 역사적 조건 아래에서 만들어진 주체들은 때로는 과도하게 민족주의적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맥락을 사회운동에서는 어떻게 조율하여 연대할 것인가?

## 1. 국제정세-국내정세라는 이분법적 인식의 극복

이번 토론회와 두 편의 발제문은 국제정세를 사회운동의 인식 속으로 강하게 끌어오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운동에는 국제정세 분석이라는 ‘전통’이 존재했으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다소간 존재했던 것 같다. 국제정세와 국내정세를 유기적 통합체로 인식하는 사고가 다소 부족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역사와 현실은 국제정세와 국내정세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국제정세라고 인식되는 부분도 국내정세와 사회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정세가 더욱 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국제질서의 변화, 타국 국내 상황의 변화 및 불안정, 전세계적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 등이 한국의 안보, 경제 등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의 안보 문제가 주로 남북관계 상의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의 국제정세는 더 이상 남북관계 상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은 국제정세에 대한 관습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정세가 국내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통합적 일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사회운동의 기획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박기형 님의 발제문은 현재 사회운동의 곤혹과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발제문은 국제질서의 변동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길을 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사회운동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화된 정세 하에서 사회운동이 더욱 기민하게 조용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박기형 님 발제문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적인 세계의 재구조화 원리로서의 비폭력과 돌봄은 사회운동이 지향할 변화의 원리로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서 추상적인 구호나 지향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운동의 구체적인 원리이자 과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후에도 고민과 토론이 지속되면 좋을 것 같다.

## 2. 국제질서에서 국가에 대한 사회운동의 전략

박기형 님의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질서에서 국가만을 유일한 행위자로 보는 국가중심적 시각은 확실히 문제적이다. 그런데 국가가 군대라는 무장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듯하다. 국가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사회운동이 국가를 완전히 우회하거나 외면 혹은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군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사회운동이 국제질서에서 국가만을 유일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사회운동의 국제주의 전통에서는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안

보 방면에서는 한국의 경우 사회운동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다. 과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일부에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의 민주적 통제’를 사회운동의 과제로 제기하기도 했지만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국 사회운동의 이러한 특징은 분단 상황의 영향도 컸던 것 아닐까 싶다.

국제질서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전략과 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제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운동의 전략은 이것이 전략이라기보다는 원칙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일면 전략의 부족 혹은 부재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제연대가 모든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 ‘전략’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반전운동과 연대 활동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활동이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 반전운동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 현실적인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사회운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판단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질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1967년 프랑스의 장 토크 고다르 등 일군의 영화감독들은 <베트남에서 멀리 떨어져>라는 영화를 제작해 당시 베트남전쟁과 반전운동에 대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 3. 20세기 이데올로기의 역사화 및 재평가 필요성

反/제국주의 담론은 사회운동 내에서 국제질서를 분석하는 주요한 인식틀이다. 이 담론은 19~20세기 초반 전세계적 식민주의를 거치면서 20세기 초에 형성되었다. 서구와 일본이 주도한 식민주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민중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반제국주의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형성되었다. 실제로 지난 세기 반식민주의와 반제국주의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혁명과 사회 변화에 성공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는 반제국주의 사회운동과 결합해 사회변혁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제국주의 침략 국가와 식민지 피해 국가라는 이분법적 인식은 쉽게 침략국=악, 피해국=선으로 단순화되었고 이러한 선명성은 제국주의 담론의 확산에 기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구조화된 국제질서에서 그 이전에 형성된 담론과 개념들이 과연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상황은 변했는데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담론과 개념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듯하다. 물론 상황이 한순간에 전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과 개념도 한순간에 설득력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변했고, 세계는 신자유주의, 무역과 경제 구조의 국제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 등을 거치며 변화는 더욱 빠르고 광범위해졌다. 한국 사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20세기 초에 형성된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사회운동 내 이러한 담론은 부단히 토론되고 갱신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현실을 설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충분하고 본질적이었는지 의문이다.

신냉전 담론은 박기형 님 발제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의 지점이 많지만, 쉽게 반제국주의와 결합해 논리적이고 선명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렇기에 효율적이고 매력적이다. 반제국주의의 논리를 동원하면 반제반미에서 그 상대에 있는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논리적으로 귀결되기 쉽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푸틴은 연설을 통해 1917년 러시아혁명과 사회주의 소련을 전면 비판하는 말을 쏟아냈는데도 일부 ‘좌파’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기묘한

형국이다. 이는 반제국주의 담론이 인식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신냉전’이라는 말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조심스럽지만,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주의 등의 담론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닐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반제국주의는 ‘모든 주권국가는 평등하다’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강력한 관념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평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다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인 ‘국제’ 질서를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그렇다면 이는 모두 제국주의 시대였고 조선과 고려는 식민지였다고 해야 할까. 그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평등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면서 더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상상해야 할까.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는 테제는 여전히도 중요한 원칙이지만, 현재의 국제질서는 현재에 맞게 재평가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

또한 박기형 님 발제문 중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정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에 공감하며, 최근 국제 질서의 변동과 세계적 자유주의의 퇴조(포퓰리즘의 확산)에 더욱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자유주의의 퇴조는 소위 ‘포퓰리즘’의 확산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초래할 변화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1차 세계대전 시기를 상당히 연상시킨다. 그만큼 위험하고 폭발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때, ‘포퓰리즘’ ‘극우’ 등과 같은 개념이 얼마나 정확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다소 회의적이다. 이러한 개념은 이해보다는 배제와 적대라는 강력한 정치적 효과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배제와 적대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등에서는 소위 ‘포퓰리즘 극우’ 정권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정치적 규정만으로는 이들을 지지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개념은 그러한 현상의 풍부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의 정치적 주장을 단순히 ‘극우 포퓰리즘’으로 범주화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주장 중에는 기존의 개념으로 ‘좌파 사회주의적’이라고 인식될 만한 주장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프레임으로는 사람들이 왜 ‘극우 포퓰리즘’을 지지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좌파, 우파, 극우, 포퓰리즘’ 등의 개념은 인식적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또한 실천적 의미를 구성해 온 개념들이지만, 대결보다는 이해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벗어나서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정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버릴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추구해 온 긍정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으로 교체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4. 분단과 통일 문제의 역사화와 사회운동

분단문제와 북의 문제를 사회운동의 문제의식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자는 홍명교 님 발제문의 제안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북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도 중요하지만)과 별개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북의 사회주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사상 자원으로 삼고, 분단 및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한 행위자로서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진행되면 좋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주요하게 ‘역사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분단과 북의 문제는 철저히 역사화해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홍명교 님의 발제문에서는 “통일 담론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공존체제 담론으로 이동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분단은 역사적 사건인데 역사적 맥락에서의 설명이 없이 평화공존으로의 이동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분단, 분단의 결과로서의 분단 모순이 탈역사화된 ‘평화공존’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북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핵무기 반대’가 아니라(이러한 구호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더라도) 역사화된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의 체제 성립과 이후 이어진 봉쇄와 제재,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 이후 북의 안보 위기감 등과 같은 역사를 고려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봉쇄와 제재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북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사회운동의 입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이 분단, 북핵 및 한반도 비핵화, 북의 체제 등의 문제를 더욱 철저히 역사화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관념은 실상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특정한 관념을 자연화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특정 관념의 자연화에 저항하는 역사화 작업으로서, 결과적으로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다. 이러한 역사화 작업을 통해 사회운동이 새로운 사회를 상상할 때 북의 체제와 역사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다.

- 북한을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인식한다면 ‘북조선’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다소 과감하게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함께 고민을 청하는 마음으로 토론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교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길내는모임)은

- 체제에 갇히지 않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며 다른 세계로 길을 내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 시대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다르게 싸울 수 있는 전망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활동가모임입니다.
- 사회운동의 쟁점과 전망에 관한 토론을 조직하고 활동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가모임입니다.
- 활동가들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사회운동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문제의식을 심화하는 활동가모임입니다.

길내는모임을 함께 만드는 **길내는모임원**이 되어주세요.

-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로 길을 내고자 하는 활동가와 사회운동 단체.
- 서로 다른 운동과의 교류를 기대하고 촉진하며 품을 내고 마음을 내는 활동가/단체.
- 시간을 내어 길내는모임의 활동에 기획, 준비, 진행,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합니다.
- 회비를 내어 사회운동의 다른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함께 합니다.
- 단체의 경우 회비는 월 2만 원 이상입니다.

2023년 길내는모임은

- 분기별(6,9,12월) ‘내는 회의’에서 전체적인 활동계획과 진행을 논의해갑니다.
- 사회운동의 다른 길을 고민하며 분기별(5,8,11월) ‘쟁점토론회’를 이어갑니다.
- 서로 교차하는 사회운동으로 ‘가로지르길’ 바라며 내년 2월 서로/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 활동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길내는 다과회’를 진행합니다.

[신청] 길내는모임원으로 함께 해요



[bit.ly/길내는모임원함께](https://bit.ly/길내는모임원함께)

길내는모임 홈페이지 오픈!



[bit.ly/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https://bit.ly/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